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박원순입니다.

불법촬영 및 유포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온라인상의 성희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사회 이슈화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여성이 안전한 도시가 모두가 안전한 도시’라는 명제 아래, 2013년부터 여성안전종합대책인 「여성안심특별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한 번 발생하면 피해자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인격살인으로 이어지는 사이버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실태조사 실시, 피해자 위기극복 지원, 시민인식개선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을 위한 안내서’는 아직은 체계적인 정리가 미흡한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정의부터 특징, 사건해결 안내들을 일목요연하게 담아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 안내서가 사이버성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와 가족들, 지원기관 종사자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존중서울을 만드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들어가며

카메라 불법촬영, 유포, 온라인 공간 안에서의 성희롱은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2001년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고, 『Delete! 사이버성폭력 -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현황과 대응방법을 자료로 펴낸 바 있습니다.

당시에 온라인, PC통신상 성적 괴롭힘에 강조점이 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단체카톡방에서의 성희롱, 사진합성, 이미지조작,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관계 촬영과 유포, 때로는 전연애상대에 대한 보복성 유포, ‘소라넷’ 등에서의 강간 모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이버성폭력이자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명명하고자 합니다. 사이버성폭력은 인터넷이나 디지털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현실상의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 폭력, 성산업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데이트 폭력, 데이트 성폭력, 술과 약물에 의한 준강간, 강간, 성매매와 연결됩니다.

사이버성폭력 피해자들은 본인의 신상노출에 대한 공포와 고통으로, 거금을 들여 삭제 업체에 의뢰해 사진 영상을 삭제하는 개인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 올림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울시는 피해자 심층 면접을 바탕으로 사이버성폭력 개념과 특징, 문제점, 피해유형별 사건해결 안내와 피해자/지원자가 함께 점검할 내용 등을 안내서로 만들었습니다. 이 안내서가 지원자에게 힘이 되고, 길을 찾아나가는 피해자들에게 꼭 필요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I. 사이버성폭력이 무엇인가요?	8
1. 사이버성폭력이란?	9
2. 사이버성폭력의 현황	10
3. 가해행위별 유형과 종류	13
4. 사이버성폭력 용어를 알아봅시다	15
II. 사이버성폭력의 원인과 특징 살펴보기	18
1. 사이버성폭력, 왜 발생하나요?	19
2. 기존의 성폭력과 무엇이 다른가요?	23
3. 여전히 공통점도 존재합니다	29
III. 사이버성폭력 사건해결안내	32
1. 대응에 앞서 생각해 볼 것 : 신고, 고소와 함께 해야 할 고민들	33
2. 성폭력 고소 과정에서의 2차 피해 점검표	38
3. 사이버성폭력 수사관을 위한 지침	39
4. 사이버성폭력 법적 대응 : 유형별 과정	41
5. 비동의의 성적영상 유포 대응하기	52
IV. 성폭력 사건지원자를 위한 안내	59
1. 지원과정과 소속공간별 해결 절차	62
2. 지원자로서 나 돌아보기	71
V. 사이버성폭력에 맞서기	79
1. 법과 제도의 변화가 필요해요	80
2. 인식 개선과 문화운동에 함께해요	82

부 록

1. 성폭력피해자 권리보장 제도	86
2. 도움받을 수 있는 곳	89
3. 참고할만한 수사·재판 절차와 용어	90

I 사이버성폭력이 무엇인가요?

1. 사이버성폭력이란?	9
2. 사이버성폭력의 현황	10
3. 가해행위별 유형과 종류	13
4. 사이버성폭력 용어를 알아봅시다	15

II	사이버성폭력의 원인과 특징 살펴보기
III	사이버성폭력 사건해결안내
IV	성폭력 사건지원자를 위한 안내
V	사이버성폭력에 맞서기

1. 사이버성폭력이란?

사이버성폭력은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의미하며, 젠더에 기반한 폭력입니다.¹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인터넷 기반 성폭력, 성적 이미지 조작/착취 성폭력, 온라인 기반 성매매, 온라인 상의 성적 괴롭힘 등이 포함되며, 행위를 매개하는 기술적 의미와 피해 발생 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²

1 1993년 UN의 여성폭력철폐선언 : 여성에 대한 폭력이란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인 피해나 고통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종류의 젠더 폭력을 뜻한다. 이는 공적 또는 사적 생활에서의 협박, 강압, 또는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가족 내, 사회 일반, 국가 차원에서의 폭력 등을 포함한다.

2 사이버성폭력은 현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등에 처벌 근거가 제시되어 있으나, 학계와 운동단체들에서는 이 법령들을 포함하는 명칭으로서 최근 온라인성폭력, 디지털성폭력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해외에서는 cyber-sexual harassment, online-harassment, cyber-stalking, cyber-sexual violence, cyber-rape 등의 다양한 용례를 사용해 왔다(김은경 외, 2000, 『신종 성폭력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특히 최근 미국의 경우는 온라인 성폭력의 개념보다 물리적 폭력의 개입이 어려운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성희롱(online-sexual harassment)을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캐나다의 경우 사이버 스토킹과 사이버 성희롱, 개인의 신체 이미지나 성행위 영상의 유포 및 관련된 협박, 성적 모욕과 공격,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행위 유인 등을 포괄하여 cyber-sexual violence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이수연 외, 2014,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용어 정의와 관련해서는 향후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이 안에서서는 불법 촬영과 유포 뿐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한 의미를 포괄하고자 사이버성폭력으로 정의하였다.

2. 사이버성폭력의 현황

예전엔 잘 몰랐던 성폭력

- 온라인을 중심으로 실재하지만 설명되거나 보이지 않았던 성폭력이 피해 당사자들의 말하기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 많은 여성들은 메신저 창에서 행해지는 음담패설에 대해, 동의없이 촬영하고 유포한 영상을 포르노로 소비·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그것은 성폭력이라고 명명합니다.
- 온라인상에 만연한 언어적 성폭력은 ‘여성혐오’의 일종으로 고발되었고, ‘#00계 내 성폭력’과 같이 여러 분야의 성폭력이 SNS를 기반으로 폭로되고 있습니다.
- 여성들은 술과 약물에 의한 강간, 집단 강간 모의, 사진 및 영상 유포가 일어나는 ‘소라넷’과 같은 사이트를 사회적으로 고발하였고 그 결과 사이트가 폐쇄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대한 대항 담론의 확산은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성폭력들을 가시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늘어나는 신고 · 상담 · 심의 요구

- 대검찰청 집계에 따르면³ 성폭력 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107.2% 증가하였고, 그 중 가장 급격하게 증가한 유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2006년 전체 성폭력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비율은 3.6%(517건)이었지만, 2015년에는 24.9%(7,730건)로 증가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역시 2006년 1.4%(195건)에서 2015년 3.7%(1,139건)로 증가했습니다.⁴

3 2006~2015년 인구 10만 명당 발생 범죄건수. 여기에서 ‘발생건수’란 전국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사건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며, 발생한 범죄사건 중 각급 수사기관이 발생사실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건수를 의미한다. 대검찰청(2016), 『2016범죄분석』, 3쪽.

4 대검찰청(2016), 『2016범죄분석』, 15-16쪽.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리침해 정보 심의 현황을 참고하면⁵ 개인 성행위 영상이나 타인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 또는 영상을 게시판, 블로그, 토렌트, P2P, 웹하드⁶ 등에 불법 유포한 사례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는 2014년 1,679건에서 2015년 3,768건으로 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법적, 제도적 해결의 공백

- 사이버성폭력은 증가하고 있지만 해결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소율은 2013년 53.6%, 2014년 43.7%, 2015년 32.2%로 해마다 점차 낮아져왔습니다.⁷
- 2011년 1월부터 2016년 4월 말까지 선고되어 확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1심의 판결문 1,540건을 살펴보면, 1심의 형벌종류는 벌금형 71.97%, 집행유예 14.67%, 선고유예 7.46%, 징역형 5.32% 순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벌금형의 경우 79.97%가 300만원 이하였고, 대부분의 징역형량은 6개월~1년 사이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카메라이용촬영 사이버성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처벌 수위는 낮고, 처벌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⁸
- 그간 사이버성폭력의 법적, 제도적 해결에 공백이 있어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그 몫을 감당해 왔으나 2017년 9월 26일 정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향후 사이버성폭력 사전예방 및 규제, 피해자 지원 전반에 걸친 긍정적 변화가 기대됩니다.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6), 『2015방송통신심의연감』, 139-140쪽.

6 본 안 내서 15쪽 참고.

7 검찰연감 통계시스템,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2017),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1호』, 28쪽에서 재인용.

8 분석대상이 되는 판결문은 서울 지역을 관할로 두고 있는 각급 법원에서 수집한 것이며, 대법원도서관의 판결문 검색, 열람제도를 통하여 해당 사건의 기본정보를 검색하고, 열람신청, 사본제공신청을 통하여 수집한 것으로 판결문에 대한 열람, 복사제한 등이 된 판결은 제외되어 있다. 김현아(2016),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실태 및 판례 분석”, 『온라인 성폭력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여성변호사회, 14-34쪽.

사이버성폭력 사건해결, 나침반 필요

- 사이버성폭력은 90년대 PC통신시절부터 2000년대 초 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시기를 지나 현재까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 사이버성폭력은 핸드폰, 카메라, 컴퓨터 등의 매체나 가상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데이트 폭력, 데이트 성폭력, 준강간, 스토킹, 성매매, 공공장소 침입 등과 연관되는, 현실 성폭력의 반영이자 연장선에 있습니다.
- 사이버성폭력은 지금의 인터넷 환경과 매체의 특성에 따라 다른 용어, 기술, 매커니즘으로 접근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지원자는 어떻게 사건지원을 할 수 있는지, 함께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전망을 그릴 것인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3. 가해행위별 유형과 종류

가해행위별 유형

유형	성격	예시
촬영물 이용 성폭력	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형/직접 촬영형 ·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 유포로 이어질 가능성 다분
	유포 /재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행위 촬영물 유포/재유포 · 본인이 동의하여 촬영한 촬영물(최초 유포자 본인) 포함 · 촬영 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유포 시 촬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재유포 · 얼굴사진과 성적 사진을 합성하거나 조작하여 유포
	유포협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 괴롭힘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유통/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 목적으로 사이버성폭력 촬영물의 유포 방조 및 협력 ·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을 시청·공유·저장 등의 방식으로 소비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사진과 함께 성적인 모욕성 글을 함께 게시 ·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링크) 제공 · 사이버 공간 내 성희롱

변형카메라의 종류



[그림 1 : 물병형 몰래카메라]

출처 2017.7.25.일자, 동아일보, “들킬 확률 0%”
감쪽같은 물병 캠코더 논란…몰카의 진화?
<http://news.donga.com/3/all/20170725/85515770/2>



[그림 2 : 옷걸이형 몰래카메라]

출처 2017.10.28.일자, 아시아 경제, “옷걸이가 아니라 몰카?...미국·영국 휩쓴 ‘스카이 후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028132406300>



[그림 3, 3-1 : 차키형, 안경형, 배터리형 몰래카메라] 출처 2017.10.1.일자, 중앙일보, “안경, 배터리형 ‘몰카’도… 여자친구 ‘몰카’ 촬영자 등 검거” <http://news.joins.com/article/21987349>



9 헤어진 전, 현 애인에 대한 보복의 의미로 성관계 등을 담은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 혹은 보복 포르노)’라고 칭해왔으나, 이는 ‘포르노’라는 용어가 피해자를 대상화하고 피해의 의미를 삭제한다는 문제제기 속에 대체 용어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왔다. 이에 이 글에서는 가해자의 행위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보복성 성행위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으로 칭하고자 한다.

4. 사이버성폭력 용어를 알아봅시다.

사건지원에 필요한 용어

DNA 필터링

- 음악 또는 동영상 파일에서 해당 파일만의 고유 특성을 추출해내는 기술

NAS

- 외장하드의 종류
- 컴퓨터 네트워크에 연결된 파일 수준의 컴퓨터 기억장치로 서로 다른 네트워크 클라이언트에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제공

P2P

-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것
- 모든 참여자가 공급자인 동시에 수요자가 되는 형태

SNS

-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이나 상호적 관계를 구축해 주고 보여 주는 온라인 서비스 또는 플랫폼
예) 페이스북, 트위터 등

리블로그

- 텀블러에서 타인이 올린 게시물을 공유하여 저장하는 기능

마그넷

-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특정 파일이 있는 웹상에서의 위치를 알려 주는 인터넷 주소
- 토렌트(Torrent)와 결합되어 있음

비트코인

- 지폐나 동전과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화폐 (디지털 통화)

스냅챗

- 사진과 동영상 공유에 특화된 모바일 메신저
- 보내는 사람이 받는 이의 확인 시간을 설정해 일정 시간 후 메시지를 자동 삭제할 수 있는 이른바 '자기 파괴' 기능이 큰 특징

썸네일

- 동영상 혹은 페이지 전체의 레이아웃을 검토할 수 있게 대표 이미지를 작게 줄여 화면에 띄운 것

웹하드

- 온라인 공간에서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 현금으로 결제한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다운받아 볼 수 있음

크롤링

- 웹 크롤러(web crawler)에서 출발한 말로 무수히 많은 인터넷 상의 페이지(문서, html 등)를 수집해서 분류하고 저장한 후에 나중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함

텀블러

- 마이크로 블로그 사이트에 소셜 기능을 접목한 서비스
- SNS와 일반 블로그의 중간 형태

토렌트

- 파일을 통째로 주고 받는 P2P와 달리, 수많은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분산되어 있는 파일의 부분을 모아 다운받는 파일 공유 방식
- 인터넷으로 개개인이 자료를 주고받을 때, 개인 PC가 모두 서버가 되며, 동시에 클라이언트가 되는 방식

해시값

- 복사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암호같은 수치
- 일반적으로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지문'으로 불림

해비업로더

- 인터넷 사이트에 콘텐츠를 대량으로 올리는 사람
- 주로 아이디로 불림

사이버성폭력 관련 은어

고등어/ㄱㄷㅇ

- 고등학생 대상 비동의 유포 성적촬영물에 대한 은어

골뱅이

- 심신미약 상태의 여성을 지칭하는 말
- 사이버성폭력 피해촬영물 말머리로 붙었을 경우 심신미약 상태의 여성을 강간하는 영상임을 암시

국노/국NO /국산맘음

- 국내에서 촬영된 촬영물이며, 노모자이크, 즉 모자이크 없이 성기 및 음모가 나온다는 의미
- 사이버성폭력 피해촬영물임을 암시

국산

- 포르노 콘텐츠 제목 앞에 붙는 말머리
- 국내에서 만들어진 포르노라는 뜻으로 성폭력 피해촬영물임을 암시함

ㄷㅈ

- 불법도촬 촬영물을 암시하는 은어

은꼴

- 은근히 끌리는 사진의 약자
- 주로 일반인 불법도촬 사진이 은꼴사진으로 소비됨

지인능욕 /지인얼싸

- 여성지인의 사진에 사정한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실제로 사정한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

I

사이버성폭력이 무엇인가요?

II

사이버성폭력의 원인과 특징 살펴보기

- 1. 사이버성폭력, 왜 발생하나요? 19
- 2. 기존의 성폭력과 무엇이 다른가요? 23
- 3. 여전히 공통점도 존재합니다 29

III

사이버성폭력 사건해결안내

IV

성폭력 사건지원자를 위한 안내

V

사이버성폭력에 맞서기

1. 사이버성폭력, 왜 발생하나요?

젠더 기반 폭력과 혐오문화

-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2016)¹⁰를 살펴보면, 자신이 여성인 이유로 비난 받을까봐 두려움을 느낀다는 문항에서 기타여성¹¹은 63.9%가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선택하였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위협, 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대해서는 기타여성의 87.1%가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답하고 있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느끼는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2016)의¹² 상담통계 분석에 따르면, 길거리괴롭힘(Street Harassment)을 경험한 피해자들 중 공공 화장실에서의 촬영 피해가 43%에 달합니다. 이러한 비동의 촬영은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길거리,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괴롭힘이나 직접적인 성폭력과 연결되어 있으며, 심각하게는 살인에 이르기도 합니다.
- 여성 뿐 아니라 기존의 젠더 규범과 다른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에 대해서도 혐오표현은 일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익명적인 집단에 의해 발생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 가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젠더위계와 차별적인 문화에서 비롯됩니다.

10 홍성수 외(2016),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89쪽 참고.

11 이 보고서는 혐오표현의 주된 대상이 되는 집단을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4개 집단으로 선정하였고, ‘기타여성’은 성적 소수자가 아닌 비장애 선주민 여성을 말하는 표현으로 사용하였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홍성수 외(2016),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79쪽 참고.

12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2016), 『공공장소 SEXISM : 소수자 괴롭힘과 시민성』, 19쪽.

대중매체에서의 여성 차별적 문화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6)에서 분석한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에 따르면, 6개 방송사 64편의 드라마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27.1%)하거나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외모주의 강조, 성적 대상화하는 내용이 15건(25.4%)이었고, 35개의 인터넷 매체 모니터링에서는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22건(39.3%)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미디어는 그 영향력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확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성을 타자화, 도구화하는 시선은 미디어를 통해 학습될 수 있고, 훔쳐보기, 불법 촬영과 유포를 추동하는 배경이 됩니다.

남성중심적인 인터넷/사이버 공간

- 온라인에 기반한 공간에서는 ‘여성적’ 아이디어를 쓰거나, 여성으로 추측될 때 더 쉽게 원치 않는 성적 접촉, 성적 욕설, 사이버스토킹의 표적이 되어왔습니다(윤세정, 1999; 이선영, 1999; 권김현영 외, 2001;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2001).¹³
-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댓글, 사이버 불링¹⁴ 등 직접적인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여성에게 적대적인 온라인 환경을 형성하여, 여성유저들이 자신의 젠더를 감추거나 아이디어를 변경하고 공간을 떠나게(탈퇴하게) 하며 이용에 제약을 가할 뿐 아니라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13 윤세정(1999),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선영(1999),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여성배제 구조와 저항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권김현영 외(2001), 『20세기 여성 사건사』, 여성신문사,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성폭력상담소(2001), 『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참고.

14 cyber bullying(사이버 불링) :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동 또는 그러한 현상을 일컫는다. 즉,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메신저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상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일컫는다. 사이버 불링의 형태도 다양한데, ① 단체 채팅방 등에 피해 대상을 초대한 후 단체로 욕설을 퍼붓는 ‘떼카’ ② 피해 대상을

남성중심적인 인터넷/사이버 공간 사례

: 게임 내 여성캐릭터나 여성 게이머에 대한 차별

게임 내 성폭력에 반대하는 모임인 전국디바협회는 활동의 계기와 목적에 대해 “여성 유저들은 온라인 게임상에서 플레이를 할 때 남성 유저들의 무시나 비하를 겪기도 하는데요. 이를 막는 것과 동시에 여성 게이머들의 권리 확보와 차별 중단이 목적”이라고 말한다. 특히 게임계에서 여성 캐릭터나 여성 게이머들에 대한 차별적, 혐오적 대상화가 다수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여성으로 의심되는 아이디를 보면 손가락을 놀리고 싶어 안달이 나는 일부 유저들, 여성 게이머에 대한 심각한 언어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빨러(여성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잘해주는 사람)’라는 멸칭을 붙이는 행위 등이 있다.

출처 페미위키, https://femiwiki.com/w/%EA%B2%8C%EC%9E%84%EA%B3%84_%EC%97%AC%ED%98%90

- 2010년 미국에서의 인터넷 괴롭힘 조사에 따르면, 모든 지표에서 여성이 더 많은 괴롭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13년 한국에서의 연구에도, 남성은 여성보다 더 많이 플레이밍(적대, 모욕행위)을 하며,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 경험이 많을수록 플레이밍을 많이 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¹⁵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되고 온라인에 접속하는 횟수와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러한 젠더권력의 비대칭이 심화되지 않도록 대책과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대화방으로 끊임없이 초대하는 ‘카톡 감옥’ ③ 단체방에 피해 대상을 초대한 뒤 한꺼번에 나가 혼자만 남겨두는 ‘방폭’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사이버 불링의 행위가 더 확대되면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 상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성매매 사이트 등 불법·음란 사이트에 피해 상대의 신상정보를 노출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온라인상에 한번 올라온 욕설과 비방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보고 퍼나르기 때문에 완전 삭제가 어려우며, 또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은 물론 동영상과 합성 사진 등으로 인한 시각적 충격을 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

출처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06703&cid=43667&categoryId=43667>

15 권김현영(2017), “영페미니스트, 넷페미의 새로운 도전”, 권김현영·손희정·박은하·이민경 지음, 『대한민국 넷페미사』, 나무연필, 59쪽, 재인용.

사법절차 및 피해구제장치의 미비

- 피해자들이 사이버성폭력을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에 찾아갔을 경우, ‘네가 조심하지 그랬냐’, ‘이 정도 가지고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또한 ‘몰카’와 같은 단어로 희화화, 사소화되는 경우들도 여전히 발생합니다.
- 현재 피해자들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요구인 영상물 삭제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이 미비하여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금전적, 물리적 역량을 투입해야 하고, 치유와 회복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판단 기준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인데, ‘다른 사람의 신체’가 어떤 부분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피해자의 호소보다 ‘선정성’에 대한 법관의 주관적 해석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¹⁶ 또한 불법촬영이 ‘호기심’이나 ‘호감’으로 인한 촬영이었다면서 무죄로 판결된 사례들도 있습니다.¹⁷
- 사이버성폭력은 전 세계 인터넷망을 활용한 플랫폼 운영업체의 상업적 유통 과정, 이익과 깊이 관련되어 있어서 피해자 개인이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음에도, 국제공조를 통한 법적제재가 부족하여 피해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인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경각심과 국가간 협력, 피해자 중심의 처벌과 규제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합 886판결 참조

17 2014고단2013, 2013고합886 판결문 참조

2. 기존의 성폭력과 무엇이 다른가요?

발생 공간의 특성

- 사이버/온라인 공간에서의 성폭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함
-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할 수 있음
- 가해 업체 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가해자가 외국에 있을 때 처벌이 어려움
- 피해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사진/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맞는지 확실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됨

사례 1 - 사진유포피해

“전 남자친구 계정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가계정이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잉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제 나체로 보이는 사진을 공유를 했고요, 사진이랑 메시지로 저에 대한 허위사실 같은 걸 함께 유포했고, 저는 당시에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제 친구가 그 메시지를 본 다음에 저희 집에 직접 찾아와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봐서 이제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 피해자와 가해자가 1대1 구도가 아닌 1대 다수인 경우가 많음
- 직접촬영, 시청, 다운로드, 업로드, 댓글 성희롱 등 익명의 무수한 가해자가 존재

18 김현아(2016),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실태 및 판례 분석”, 『온라인 성폭력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여성변호사회, 23-24쪽.

사례 4 - 사이버 공간 내 성희롱

“지인에게 부탁하면서, 그 700명 중에 댓글 고소할 사람을 고르는 것도 사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천 명에게 욕을 들었던 순간이 아직 뇌리에 남아 있어서 지금 생각해도 막 심장이 아프고 머리 깨질 것 같고 그런 게 계속 있거든요.”

- 공공장소에서의 불법도촬의 경우 모르는 사람이 많고(89%), 아는 사이일 경우 연인 사이가 가장 많음(43.68%)¹⁸
- 비동의의 성적촬영 및 유포의 경우 전, 현 데이트 관계가 40%로 가장 많음¹⁹
-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은 모르는 사이에서도 발생하나, 직장/학교 등 아는 관계에서의 성적 희롱, 이미지, 영상, 악플 등이 게시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음

학교	시기	남학생수	내용	징계내용
서울대	2015년 2~8월	8명	여동기를 '먹는 대상'으로 표현 '숨가편치' (가슴을 만짐) 등	조사중
연세대	조사중	30명	"맞선 본 여자 강간해" "여자 주문할게 배달 줌"	조사중
고려대	2015년 5월~ 2016년 6월	30여명	새따(새내기 따먹기)등 1년 간 음담패설	조사 중 신상공개 결정(학생회)
서강대	2016년 3~4월	10명	여학생 촬영 후 "못참겠다" 등 발언 특정 여학생 '김치' '메갈'이라고 비난	피해자 사과 성폭력 교육 이수
국민대	2014년 8월	32여명	"얼굴은 별로니 봉지 씌워서 하자" "여자 닮아서 회 치자" 등	주동자 2명 무기정학, 4명 근신처분
경희대	2014년	12명	성적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대화 등	1~3개월 정학, 근신처분 등

*자료: 각교 학생회 및 커뮤니티 등
그래픽: 김지영 디자이너

MT 머니투데이

[그림 4 : “여자 주문할게 배달 줌”...SKY의 ‘단톡방 성희롱’, 2016.8.3 일자 머니투데이]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90210021183140>

19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2017),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1호』, 35-36쪽.

가해자의 특성

- 다수의 익명 동조자들로 인해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죄책감이 적음
- 가해자의 연령, 소속, 사회적 위치 등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음
- 핸드폰, 온라인 등의 매체를 활용하므로 전 연령대에서 접근성이 높음
- 전 애인이 가해를 하는 경우 이미 데이트 폭력, 데이트 성폭력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피해자의 특성

- 비동의 성적촬영의 경우 자신이 찍혔을 가능성과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을 완벽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유포피해 가능성에 대한 불안 등의 심리적 피해 발생

사례 1 - 사진유포피해

“타인이 나의 나체를 알고 있을 거라는 불안함? 내가 물론 피해자긴 하지만 아...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어떤 벌거벗은 여성의 피해물이 돌아다닌다는 그 사실 만으로도 내가 비난받을 수 있겠다는 위협? 이런 것들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피해물이 있는 상황에서는, 아마 여성을 질타하거나 비난하기가 더 쉽겠죠. 근데 사회생활을 계속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어떤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고 했을 때, 타인의 시선이나 질타에서 해방되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그런 압박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 촬영물 유포협박이나 스토킹으로 가해자와의 관계 단절에 어려움을 겪음
- 가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함
- 여성단체 및 수사기관에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피해물 재유포, 신상 공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숙박업소나 공공장소 등의 경우 누구나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 성폭력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존재함

사례 2 - 비동의 성적영상 유포피해

“고등학교 때 같이 동창이었던 친구를 어떤 남자 후배가 급식실에서 뭐...재야동에 나왔다는 앤 거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그 동영상도 퍼졌던 적이 있거든요. 학교 학생들 안에서. 그런 일을 제가 겪고 자랐는데 저는 그 때 방관자 역할이었는데, 저한테 그런 일이 생기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내 피해사실을 알아도 나를 피해자로 안 대해주고 제가 그 애한테 그랬던 것처럼, 다들 방관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 일에 대해서 죄책감도 많이 들고, 그런 것도 걱정이 됐어요. 어쨌든 사람들 인식에서는 아직까지 피해자로 안 받아들이고 그냥 자신들이 보는 음란물에 등장하는 여자로만...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그런 생각들이 제일 두려웠던 것 같아요.”

수사/재판 과정 시의 특성

- 수사/재판 과정에서 관련 사진, 영상이 노출됨으로써 피해자가 재피해를 겪을 수 있음
- 유포 위험이 있을 경우 초기 대응이 부족한 경우가 존재함

사례 1 - 사진유포피해

“당시에 제가 처음 느꼈던 기분은, 아 그런 사실이 있어서 피해자분이 오셨다고 하니까, 애초에 그런 영상물을 왜 찍냐는 반응이었고, 저의 피해사실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엄청 되게 사소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수사관 중 한분은 되게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제가 막 페이스북이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신고를 하면 사진을 지워준다, 그런 게시글이 있어서 그걸 보니까 한 수분 내로 삭제가 됐던 거 같아요. 처음에 사진을 먼저 삭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이 진행이 됐어야 했는데 다들 너무 허둥지둥하고 우왕좌왕이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버린 거죠.”

- 수사/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신뢰관계인의 동석, 진술조력인 제도, 진술녹화 등)²⁰에 대한 안내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함
- 사진이나 영상물을 동의하에 촬영했을 경우 ‘정숙한 여자’, 또는 ‘보호받을 만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편견을 경험하기도 함

관련 범죄의 특성

- 가상상황 뿐 아니라 조건만남, 준강간, 스토킹, 주거/공공장소 침입, 데이트 폭력, 데이트 성폭력 등 현실 성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최음제 등 불법 약물이나, 도박, 성매매 알선 등 불법 광고와 연결

20 이 안내서의 86쪽 참고.

기술적 특성

- 피해영상 삭제 및 채증을 위한 전문적 기술이 요구됨

사회 구조적 특성

- 거대 웹하드 업체 등 유통자본산업과 연결되어 있어 개인에 대한 처벌만으로 근절이 어려움
- 사이버장의사/디지털장의사 등 삭제를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상업화되어가고 있고, 신고/고소가 어려울 시 피해자 개인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함
- 강간, 추행 등의 성폭력과 달리 ‘몰카’, ‘호기심’ 등의 언어로 사소하게 여겨지기도 함

사례 3 - 설치형촬영피해

“00가 이러는 거예요. ‘호기심에 몇 번 했다고 하더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열 받아서, ‘누가 그러던데요?’ 이랬어요. 경찰에서도 아직 조사가 제대로 안 된 건데도, ‘그런게 있다, 너는 몰라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모르면 어떡하냐’ 이러다가 한 한 시간동안 제가 계속 싸웠어요, 관리자들과랑. 싸우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뭐 먼저 말을 왜 안 했으며 애는 호기심에 했다 하더라.”

- 재유포의 우려로 사회운동적 차원에서의 폭로나 고발이 어렵고 문제해결이 개인화되며, 기존 성폭력에 비해 전문지원시설이 부족함

3. 여전히 공통점도 존재합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 2016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서 전체 성폭력 상담건수 1,353건 중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93.6%,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93%로 나타남.²¹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올림의 2015-2016년 카메라이용촬영 상담통계 분석에서도 피해자는 여성이 93.9%, 가해자는 남성이 92.1%²²로 나타남
-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고 상업적으로 소비하는 한국의 성문화와 연결되어 있음
- 저작권 침해, 사생활 침해뿐 아니라 여성의 성에 대한 착취 성격이 높은 범죄
- 가해업체/가해자의 소속 국가에 따라 처벌과 규제 수준의 차이가 큼

▼ 사이버성폭력 유형별 가해자 성별 비율(단위 : %(명))

	남	여	미상	계	출처
카메라 이용 촬영, 유포	92.1 (105명)	4.4 (5명)	3.5 (4명)	100 (114명)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올림(2017),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1호』, “2015-2016 상담통계 분석”, 34쪽.
통신매체 이용음란	81.3 (52명)	7.8 (5명)	10.9 (7명)	100 (64명)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올림(2017),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1호』, “2015-2016 상담통계 분석”, 45쪽.
인터넷 등에서의 혐오표현 댓글 경험 ²³	92.2 (119명)	7.8 (10명)	-	100 (129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남성의 삶에 관한 기초연구(Ⅱ)』, 105쪽.

피해자 본인의 역할 부담

- 피해의 발생을 증명하기 위한 피해자의 증거 수집이 중요
- 피해 상황을 본인이 저항, 차단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비난이 존재하기도 함

피해 해결의지와 치유의 힘이 존재

- 지속적인 심리적 치유와 회복이 중요
- 피해자들은 피해를 입은 이후 스스로 삭제 과정을 알아보거나, 지원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면서 힘을 찾아가며,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연대자로 나아가기도 함

21 한국성폭력상담소(2016), 『2016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3쪽.

22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2017),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1호』, 33-34쪽.

23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1,500명의 조사 대상자 중, 606명이 여성혐오표현에 공감한다고 응답하였고, 이 중 직접 여성혐오표현 게시글과 댓글을 올린 사람의 비율 21.3%(129명) 중 여성이 7.8%(10명)였고 남성이 92.2%(119명)였다. 안상수 외(2015), 『남성의 삶에 관한 기초연구(II) : 청년층 남성의 성평등 가치 갈등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05쪽 참고.

사례 1 - 사진유포피해

“사이버 성범죄...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은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극심한 자살충동을 겪었고, 다행히 잘 버텼고, 잘 생존했으니까 더 강인하게 대처해 나가고 앞으로 이런 피해사실에 관련해서 이 사회가 좀 더 매뉴얼을 갖추고, 단단하고 견고한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들을 돕는 자원활동을 시작했어요.”

사례 4 - 사이버 공간 내 성희롱 피해

“저는 페미니즘을 뭐 옹고 대의를 위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히려 가장 늦게, 가장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활동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못하더라구요. 근데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 이렇게 수십명이 죽어가는데, 이건 저만의 피해가 아니라 거의 집단적 피해거든요. 페미니스트들에게는 정말 커다란 집단적 피해예요. 남자한테는 괜찮은데 여자한테는 굉장히 법이 엄격하고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알 때 그 스트레스를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면 다들 죽어 갈거고 다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I

사이버성폭력이 무엇인가요?

II

사이버성폭력의 원인과 특징 살펴보기

III

사이버성폭력 사건해결안내

1. 대응에 앞서 생각해 볼 것 : 신고, 고소와 함께 해야 할 고민들	33
2. 성폭력 고소 과정에서의 2차 피해 점검표	38
3. 사이버성폭력 수사관을 위한 지침	39
4. 사이버성폭력 법적 대응 : 유형별 과정	41
5. 비동의의 성적영상 유포 대응하기	52

IV

성폭력 사건지원자를 위한 안내

V

사이버성폭력에 맞서기

1. 대응에 앞서 생각해볼 것 : 신고, 고소와 함께 해야 할 고민들²⁴

상황 인식하기

- **심리적·신체적 건강 살피기**

피해를 인식한 후 첫 번째로 살필 것은 심리적, 때로는 신체적 건강상태입니다. 가까운 병원에 가시거나 24시간 진료가능한 해바라기 센터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나 자살 충동, 공황장애 등이 생긴다면 정신과나 전문심리상담소를 방문하거나, 믿을만한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가 처한 사회적 상황 살피기**

두 번째로 피해가 나에게 미친 사회적 영향입니다. 학교와 직장 생활, 주변의 좋지 않은 시선 등에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성폭력 피해 때문인지 새로 생긴 어려움인지, 원래 겪고 있던 어려움이 심화된 것인지 살펴봅시다.

- **사건 정리해보기**

세 번째는 사건의 정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려울 수 있지만 기억이 퇴색하거나 왜곡되기 전에 간단하게라도 정리해 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인터넷 상에서의 모욕 등을 인지한 경로와 상대에 대한 정보, 사진/영상물 채증과 스크린샷 등의 증거를 수집하고, 시간순서에 따라 사건에 대해 기록해보세요. 혼자 기록하는 것이 힘들다면 상담원이나 믿을 만한 주변인과 함께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 **법적 규정 알아보기**

네 번째는 자신이 겪은 피해가 법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확한 용어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²⁵

24 한국성폭력상담소(2011),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DIY 가이드 : 보통의 경험』, 이매진에서 일부 수정하여 재구성

25 이 안내서의 41쪽 참고.

내가 원하는 목표 세우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방향을 잃지 않고 더 만족스럽게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예시를 참고해 내가 원하는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 봅시다.

- 나에게는 삭제지원이 필요하다.
- 나는 가해자의 촬영기기 및 컴퓨터에 있는 촬영물 삭제를 원한다.
- 나는 피해촬영물의 재유포를 막고 싶다.
- 나는 나의 사이버 불링 장면을 기록에서 없애고 싶다.
- 나에게는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
- 나에게는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 나에게는 고소를 위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 나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다.
- 나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 나는 가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받고 싶다.
- 회사, 학교, 모임 등 내가 속한 곳에서 가해자를 징계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 가족, 친구, 애인 등 가까운 사람들이 내 편이 돼서 나를 위해 함께 행동해주면 좋겠다.

나를 방해하는 요인 검토하기

내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일단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방해 요인부터 지워나가고, 방해 요인과 원하는 해결을 연결지어 구체적으로 비교해봅시다. 걱정했던 일이 실제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원하는 것 중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방해 요인이 있다 해도 꼭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아래 예시들을 참고하여 체크해봅시다. 내가 원하는 것에 가까이 가기 위해 맞서야 할 방해 요인을 발견한다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욱 명확해집니다.

- 가해자가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이 두려워 경찰신고나 공론화가 어려울 수 있다.
- 주변 사람들이 피해사실을 알게 될까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다.
-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알지 못해 경찰신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였다면, 이제 가해자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 가해자가 가해 사실을 부정하거나 오히려 나를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
- 단톡방 내 성폭력의 경우, 단톡방 참여인원 전체와의 일상적 관계 때문에 공동체 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 사건 해결을 위해 시간과 돈, 체력이 필요할 수 있다.

방해요소들을 검토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미리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힘이 되는 학교, 직장, 공동체 내 주변인, 수사, 재판관들을 만날 수도 있고, 가해자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과정들을 통해 더 단단해지는 자신을 만날 것입니다.

주변지지 체계와 나의 강점 파악하기

-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나를 도와줄 기관을 찾자**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국번없이)1366, 해바라기 센터 등 전국의 180여개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구체적인 안내를 받아봅시다.²⁶

- **나에게 적합한 제도적 지원을 검색하자**

전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의료적, 법적, 전문심리치료, 쉼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만의 강점을 파악하자**

내가 가지고 있는 행동 유형들을 강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큰일이 일어날수록 마음이 침착해진다는지, 뒷심이 있다는지 등 나의 강점들을 통해 다양한 사건 해결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힘든 일들을 내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떠올리며, 자신감을 되살려 봅시다.

사건 해결의 한계 설정하기

- **한계를 설정하자**

목표뿐만 아니라 한계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패소하거나,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어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주변에 알려지면 곤란해서 혼자서 모든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가해자가

26 이 안내서의 89쪽 참고.

외국인일 경우 등 때때로 완벽한 삭제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1년, 2년으로 기한을 정할 수도 있고, 투여할 수 있는 금전적, 심리적 자원이나, 그밖에 전혀 예상치 못한 가해자의 역고소²⁷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합니다.

- **경우의 수를 열어두자**

목표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상처받는 대신,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고소와 삭제 지원을 받는 등 초기 대처를 진행하고 있다면, 언제까지 이 일에 시간과 마음을 투여할지 고민해 봅시다. 여기까지 달려온 것만 해도 잘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거두고, 남아 있는 마음의 짐을 줄이고, 관계들을 회복하는 것에 집중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지모임을 찾아가거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해자에게는 그만큼의 힘과 지혜가 충분히 있습니다.

27 성폭력 가해자가 피소이후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거나,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성폭력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도록 협박하거나 더 이상의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수단으로 역고소를 활용하기도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한국여성의전화(2017),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참고.

2. 성폭력 고소 과정에서의 2차 피해 점검표

사이버성폭력 발생 시 고소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지 체크해보고 필요시 문제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제기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경찰서 청문감사실, 검찰 피해자 지원실,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는지에 관한 내용과 상관없이 불필요한 비난조의 질문을 받았나요?
- 평소의 품행, 평판, 직업, 성관계 이력 등 사건과 관련 없는 질문을 받았나요?
- 왜 사진/동영상을 찍었는지 반복적으로 물어보았나요?
- 증거물을 검토할 때 공개된 장소에서 담당 수사관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둘러보며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질문을 했나요?
- 반말을 사용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위압적인 수사를 했나요?
- 성폭력피해자의 권리 고지 및 절차 안내를 잘 받았나요?
-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이나 진술 조력인을 요청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나요?
- 미리 조치를 부탁했는데도 소환 과정에서 피해자 주변에 알려지게 되었나요?
-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의 입장을 고려해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하라는 압력을 받았나요?
- 수사관이나 검사, 변호사를 통해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았나요?

3. 사이버성폭력 수사관을 위한 지침

- ✓ 사건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예시 : 원래 그런 촬영물을 찍으면 위험한데 왜 찍었어요?
- ✓ 가해자를 대변하거나 두둔하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예시 : 그 사람 내가 보니까 유포는 안할 것 같던데요.
- ✓ 피해자의 행실 등 사건과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예시 : 평소 행동에 좀 더 신경 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 ✓ 사이버성폭력 피해 사건을 사소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시 : 연인 간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어떻게 일일이 다 신고를 하나요?
- ✓ 여성·청소년계에서 피해자 진술조사 시 사이버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수사관으로 배치합니다.
- ✓ 가해자를 못 잡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신고의지를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예시 : 원래 이런 사건은 가해자 못 잡아요. 진행해봤자 헛수고예요.
- ✓ 사이버성폭력에 직접 관련된 법률 ‘성폭력처벌법 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법 44조’ 등을 숙지합니다.
- ✓ 촬영물에 대한 증거물을 확보할 때 피해자에게 2차가해가 될 수 있으므로 성폭력피해자로서 신고자의 의사를 존중해가며 증거물 확보를 진행합니다.
- ✓ 해당 신고 건이 성폭력 사건임을 잊지 않습니다.
예시 : 다른 고소인, 피고소인과 같은 공간에서 진술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여성수사관을 배치하고, 독립된 진술 공간을 보장하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들을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인권보호수사준칙 [시행 2015.4.2.]

[법무부훈령 제985호, 2015.4.2., 일부개정]

제51조(성폭력 등 피해자의 보호)

①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이하 ‘성폭력 등’이라 한다)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나이, 심리상태,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환경을 조성하고 조사 횟수는 필요 최소한으로 한다.
3. 피해자를 소환하거나 조사할 때에는 피해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피해자에게 친절하고 온화한 태도로 질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이나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저속한 표현을 삼간다.
5. 성매매 피해자에게는 선불금 등 성매매와 직접 관련된 채권이 법률적으로 무효라는 사실과 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미리 알려준다.
6.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CD, 비디오테이프 등)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록과 분리·밀봉하여 수사기록 말미에 첨부하거나 압수물로 처리하는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7.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다.

② 검찰청에서는 성폭력 등 범죄에 대하여 전담검사를 지정·운영하고, 성폭력 등 범죄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수시로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시행 2015.7.28.]

[경찰청훈령 제775호, 2015.7.28., 폐지제정]

제68조(성폭력 등 범죄피해자 조사할 때 유의사항)

① 성폭력 사건의 여성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여성경찰관이 조사 또는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성매매·가정폭력·학교폭력 등의 범죄피해자가 여성경찰관에 의한 조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상담·치료기록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기록을 첨부하거나 상담원 또는 전문의 등의 소견을 참고할 수 있다.

4. 사이버성폭력 법적 대응 : 유형별 과정

적용되는 법률을 유형별로 살펴봅시다

유형	적용법률	예시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인구가 밀집된 공공장소에서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촬영 성행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
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드촬영물, 자위영상, 성적인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 동의 하에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
재유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동의 상태로 유포된 성행위 촬영물을 다운받고 다시 유포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주로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대량으로 다운 및 업로드 하여 유포
유포협박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연인 간 이별시, 이별 후 다른 연인을 만날 때, 혹은 다른 연인과 결혼 후 협박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행위 촬영물을 주고받은 후 다른 촬영물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
유통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 아청법 제1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적용 (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음란물 유포 방조 및 음란물 유통 처벌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명예훼손죄 제310조 형법 모욕죄 제3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희롱과 음담패설 및 이미지 전송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함께 게시 게임 내 성희롱 단톡방 내 성희롱

(1) 불법도촬 피해

설치용 촬영피해 사례

“직장 내 탈의실에서 우연히 초소형 몰래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몰랐지만 불빛이 깜빡거리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살펴보니 카메라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다른 여성 직원에게 알렸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누가 언제부터 설치했는지 모르겠어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 **먼저 확인해 주세요**

피해가 발생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설치형 불법도촬인지 이동형 불법도촬인지 확인

언제쯤 알게 되었나요?

피해 발생 인지 시점으로부터 경과된 시간 확인

유포피해로 확산 가능성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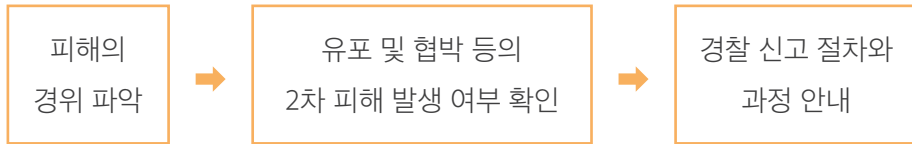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확인

불법도촬 피해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할 수 있고

불상의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음

• 지원 순서



• 해당하는 현행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TIP!

- | | |
|-----------------|--|
| 설치형 불법도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카메라를 증거물로 보존하여 경찰에 신고 |
| 이동형 불법도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자로 112에 신고접수 가능하며 지하철의 경우에는 타고 있는 지하철 칸 번호와 이동방향을 발송 · 촬영 직후 바로 삭제하였어도 디지털 포렌식 으로 일부 복구 가능 · 저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촬영한 것만으로 처벌가능 |

28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 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2) 비동의 성적영상 유포피해

비동의 성적영상 유포피해 사례

“어느 날 지인을 통해 제 성관계 영상이 유포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수년 전에 헤어진 전 애인과의 영상인데 저는 촬영에 동의를 한 적이 없어서 누가 유포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벌써 여러 군데의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보지 못하게 빨리 다 지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먼저 확인해 주세요**

피해촬영물 원본을 가지고 있나요?

어느 사이트에 올라왔는지 알고 있나요?

삭제 지원과 경찰 신고를 위해 원본 확보 여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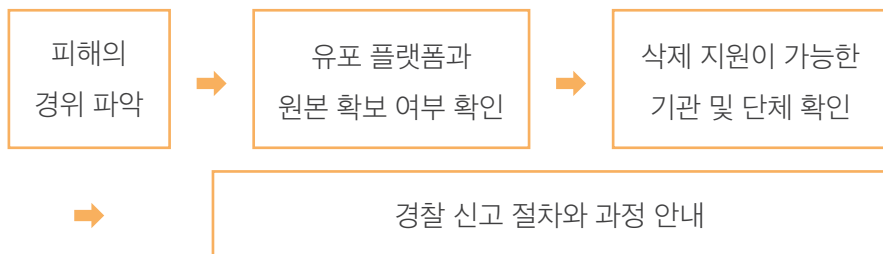
경찰 신고를 원하나요?

비동의 성적영상 유포피해의 특성상 경찰신고 등의 대응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의 신고 의사 확인

언제 촬영된 영상인지 알고 있나요?

최초 유포된 시점과 가해자 특징을 위해 촬영 시점을 확인

- **지원 순서**



- 해당하는 현행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TIP!

- 피해자는 영상이 유포되었음을 누군가가 더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피해신고조차 큰 고통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지지상담과 더불어 조심스러운 피해 경위 탐색이 필요함
- 경찰 신고 시 여성청소년과 또는 사이버수사대에서 사건을 맡게 되며 경찰서마다 차이가 있음
- 피해자가 고소를 원치 않을 경우 제 3자가 정보통신망법의 제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1항의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로 신고할 수 있음
-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피해규모가 빠르게 확산되고 저장과 복사가 용이하기 때문에 피해복구가 쉽지 않음
- 모든 피해촬영물을 완벽히 삭제하기 어려울 수 있음

(3) 재유포피해

재유포피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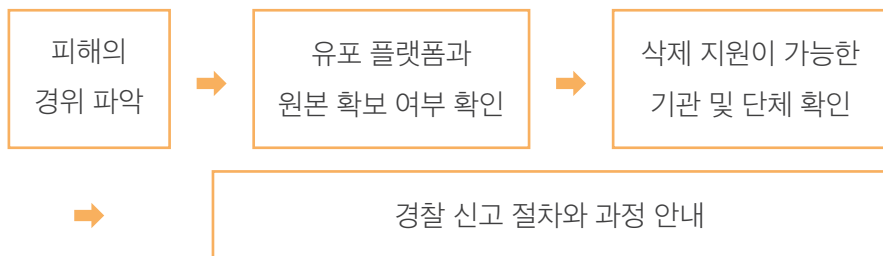
“몇 년 전 저의 몰카 영상이 유포되었다는 것을 알고 당시에 원유포자를 신고해 처벌했습니다. 피해촬영물들도 거의 다 지워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 제 영상이 또 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계속해서 조회수가 올라가고 누군가가 다시 유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먼저 확인해 주세요

사건을 인지하게 된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재유포 플랫폼과 재유포 시점 확인

- 지원 순서



- **해당하는 현행 법률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등

-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TIP!

- 단순 시청·저장도 가해 행위이나 법률적 처벌 근거가 부족해 수사가 어려움. 재업로더를 신고할 수 있도록 권유
- 재업로더 신고 시 채증 필요 : 피해 게시물 캡처, 게시자 ID 및 계정 캡처를 PDF 파일로 정리
- 피해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은 상태일 때 수사하는 것이 더 유리함을 안내하고 즉시 삭제할 것인지 경찰 신고 후 삭제할 것인지 피해자의 의사 확인
-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이 적용되지만 경우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14조에 의거해 처벌할 수 있음

(4) 유포협박 피해

유포협박 피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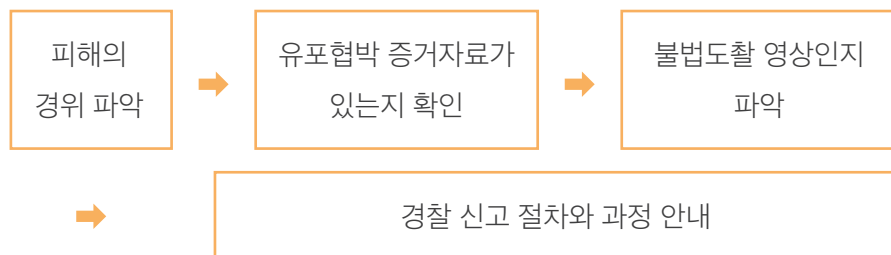
“얼마 전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헤어진 이후 연락을 무시했더니 사귀는 동안 제가 보내주었던 속옷차림 사진들을 유포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유포하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있다며 신고하면 친구들과 가족들에게까지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성관계 영상이 있는 것인지 걱정되고 유포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 **먼저 확인해 주세요**

협박 받은 증거들을 모아 놓았나요?

신고를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로 문자, 카카오톡, 전화 통화 기록, 녹취 등이 있는지 확인

- **지원 순서**



- **해당하는 현행 법률은?**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TIP!

- 유포피해로 확대될 우려가 있으나 경찰 신고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점을 설명하며 신고 권유
- 신고와 동시에 가해자의 휴대폰, PC 등의 저장매체를 모두 압수해서 수색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
- 스토킹, 물리적 폭력 등의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기에 신변 보호 요청 등의 제도 활용 권유
- 유포협박 시 비동의의 촬영물일 경우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도 함께 적용되나 동의하에 촬영한 경우는 협박죄에만 해당

(5)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피해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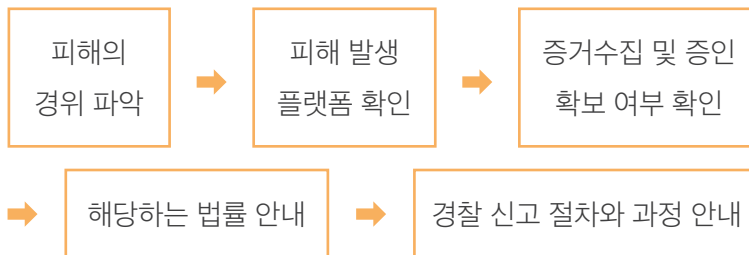
“제가 즐겨하는 게임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사람들이 절 모욕했습니다. 욕설 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제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라고 여러 명이 조롱했어요. 제가 해명 댓글을 달아도 소용이 없고 그동안 함께 게임했던 사람들마저 절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하는데 너무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 **먼저 확인해 주세요**

괴롭힘을 당한 증거 자료가 확보된 상태인가요?

경찰 신고를 위한 증거 및 증인이 있는지 확인

- **지원 순서**



- **해당하는 현행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 제70조(벌칙)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상 명예훼손죄 제 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 307조 제 1항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상 모욕죄 제311조(모욕)

형법 상 모욕죄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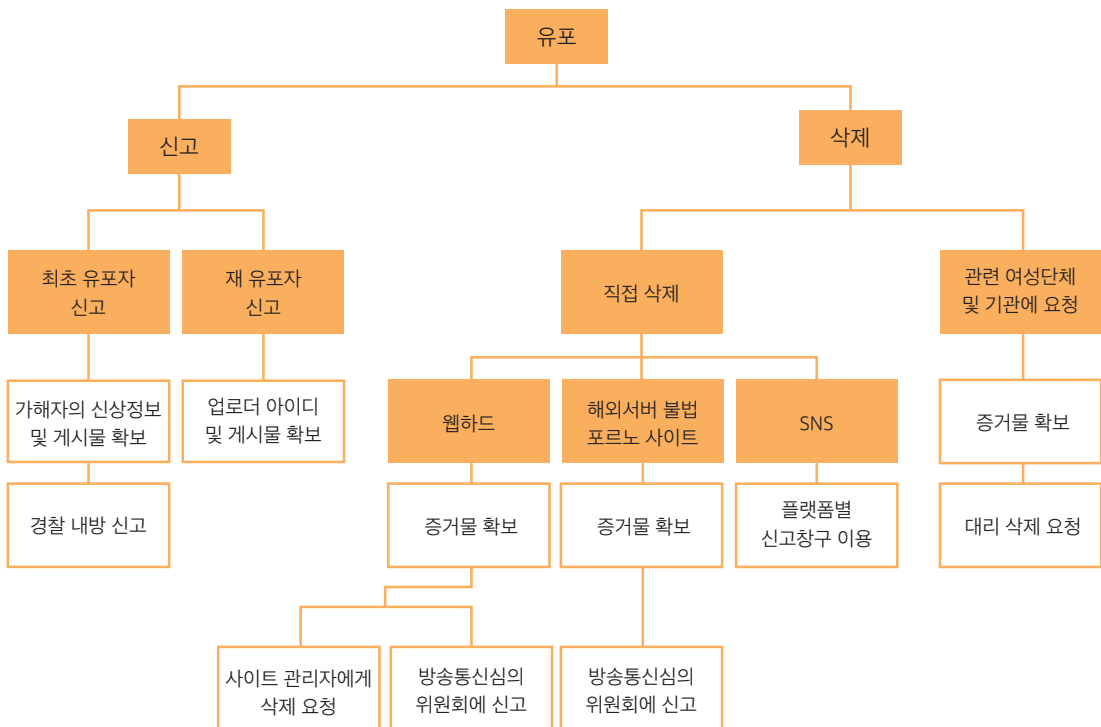
참고 TIP!

-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형태의 경우 대화방을 유지하고 있으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대화 내용 이메일로 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주고받은 메시지를 텍스트로 저장할 수 있음
- 캡처로 증거자료를 만들지 못했을 경우 증인을 찾을 수 있도록 권유
- 경찰 신고 방법
 - ㉠ 화면에 상대방의 글, 아이디, 아이디, URL, 캡처날짜 등 가능한 모든 게 보이도록 캡처
 - ㉡ 게시판 목록 등 맥락을 알 수 있는 정보들도 저장
 - ㉢ 고소장 작성(고소인 명, 고소인 인적 사항, 피고소인 명, 피고소인 인적 사항, 고소 내용, 고소일자)
 - ㉣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 증거 확보 후 해당 플랫폼에 피해게시물 삭제

5. 비동의 성적영상 유포 대응하기

사이버성폭력 피해를 지원할 때 유포피해 발생 여부에 따라 사건처리 과정이 달라집니다. 만약 유포가 진행된 경우라면 피해촬영물을 삭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유포 사건 지원 중에서도 유포피해가 2차로 발생했다면 유포피해 사건처리 지도의 삭제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성적영상물/이미지가 유포된 경우 사건처리 과정



유포된 영상의 삭제, 어떻게 하는 건가요?

- 비동의 유포 성적영상을 피해자가 직접 지울 수도 있지만, 반복되는 피해를 계속 목격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만약 피해촬영물 삭제지원이 필요할 경우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 방법은 지원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나,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삭제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서는 이렇게 삭제를 지원합니다!

① 증거 확보

유포된 파일이 올라와 있는 게시물 제목과 본문 내용, URL, 파일, 발견된 화면 캡처 등 확보

② 사건 키워드 추출

파일 제목, 게시물 내용 등을 참고하여 피해촬영물을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 추출

③ 검색 모니터링 착수

검색 프로그램을 사용해 모니터링 작업 착수

④ 검색 프로그램 구동

키워드 등록하여 프로그램 구동

⑤ 프로그램을 통해 검색된 게시물 분류

검색된 결과가 해당 피해촬영물이 맞는지 대조하여 확인

⑥ 삭제요청

- 미래부 등록 국내 P2P 사이트 61개(2017.11 기준) 웹하드 업체별로 검색 후 업체에 삭제요청
- 해외 서버 불법 포르노사이트는 대부분 사이트 관리자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경우가 많아 서버업체정보 및 도메인 구입·판매자를 찾아 삭제 조치를 요구
- 위 과정을 거쳐 삭제 및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 유포된 플랫폼마다 삭제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각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직접 삭제하길 원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경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 웹하드 사이트

- ① 피해촬영물 발견 사이트 하단의 관리자 이메일 확인
- ② 별도 신고 접수창구가 있을 경우 해당 경로를 이용
- ③ 피해촬영물 게시 제목 / 게시물 URL 주소 복사
- ④ 본 게시물이 피해촬영물임을 알리며 삭제 요구

SNS

- ① 게시물을 올린 계정 확인
- ② SNS별 사생활침해 및 개인정보 노출 신고 페이지 접속
- ③ 경로에 따라 피해게시물임을 알리며 삭제 요청

텀블러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https://www.tumblr.com/abuse/privacy>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중 사생활 침해 신고하기 클릭

1

- 사생활 침해. Tumblr를 사용해 개인 정보를 빼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용카드나 주민등록 번호, 비공개 연락처 등 신원 정보나 기밀이 담긴 포스트를 올려 사생활 침해를 하면 안 됩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성인물은 절대 포스팅하면 안 됩니다. 즉, 당사자에게 동의받지 않고 찍거나 포스팅한 개인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은 금지합니다.

[사생활 침해 신고하기](#)

대답 '예' 클릭

2

사생활 침해

신원 정보, 신용카드나 주민등록 번호, 비공개 연락처, 사적 사진 등 사생활 침해 내용을 포스팅하는 행위

사생활 침해를 당하셨나요?

예



'내 사적인 사진이 포스팅 되었습니다'

3

사생활 침해

신원 정보, 신용카드나 주민등록 번호, 비공개 연락처, 사적 사진 등 사생활 침해 내용을 포스팅하는 행위

구체적으로 무엇이 포스팅되었나요?

내 사적인 사진이 포스팅되었습니다.



요구 문항 작성하기

4

한국어로 보내주시는 문의사항은 아직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양식을 반드시 영어로 작성해서 지원팀에 보내주세요.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확인

이를 위해서는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시거나, "Tumblr, 본인 확인합니다" 라고 쓴 표지를 들고 셀피를 찍어 보내주세요. 회원님 사진은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신고대상 콘텐츠

포스트 URL

트위터 고객센터 위반 신고

https://support.twitter.com/forms/private_information

고객센터 접속

1

고객센터 > 문의서 접수

고객센터에 문의하기

귀하가 겪고 계신 문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주제를 고르세요.

Account

기능 및 설정

위반 신고하기

위반 신고하기 - 개인정보 클릭

2

개인정보 노출을 신고합니다.

신고해주신 내용을 트위터가 검토할 수 있도록 아래의 모든 항목을 작성해주세요.

누군가가 정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본인 (예: @연선, 이름, 별명 또는 필명)
- 내가 법적으로 대리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예: 클라이언트 또는 자녀)
-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예: 친구 또는 그룹)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 모두 선택)

요구 문항 작성

3

신고서 상세 정보

신고 대상자 아이디

@

(예: @safety)

신고 내용 관련 증거 트윗

트윗 URL

http://

트윗의 직접 URL을 찾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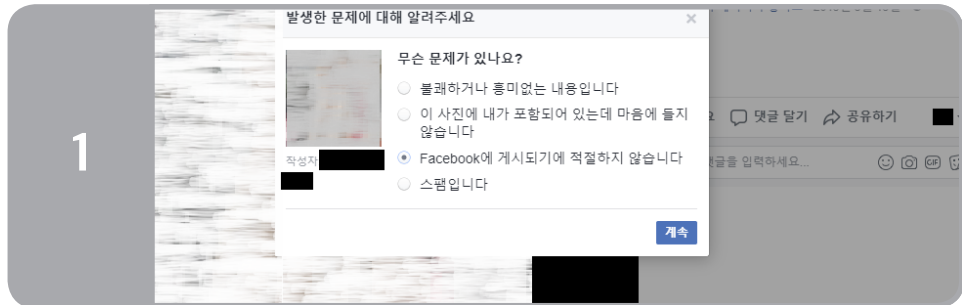
트윗 외에 다른 문제(예: 계정 프로필, 프로필 사진 또는 헤더)를 신고하시는 경우, 해당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다른 트윗 추가

페이스북 악용사례 신고

https://www.facebook.com/help/1753719584844061?helpref=hc_global_nav

게시물 하단 옵션 클릭 - 'Facebook에 게시되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클릭



'나체 이미지 또는 음란물입니다' 클릭



취할 수 있는 조치 검토 후 조치



- 국내 사이트의 경우 비교적 삭제조치가 빠르지만, 해외 포르노 사이트의 경우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국내법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삭제가 어렵습니다. 삭제를 요청할 창구를 찾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시킬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해외 불법 포르노 사이트

-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접속
- ② 전자민원 → 통신민원 → 불법·유해정보 신고
*http://www.kocsc.or.kr/receipt/receipt.php?select_status=3
- ③ 경로에 따라 피해게시물임을 알리며 삭제 요청
- ④ 불법·유해정보 민원 프로그램 사용

* http://www.kocsc.or.kr/01_online/ibb_down.php

불법·유해정보신고

> 전자민원 > 통신민원 > 불법·유해정보신고

개인정보의 유출 및 도용을 방지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인증 서비스**와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인증 서비스**를 함께 서비스 합니다. 원하시는 인증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01 휴대전화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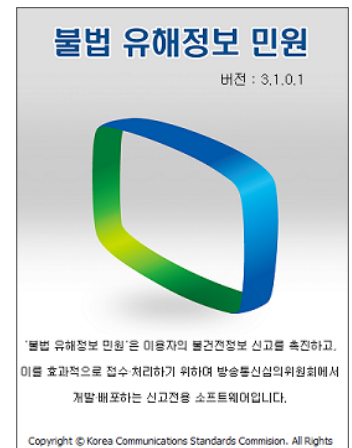
소지하고 계신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증받는 방법입니다.

[휴대전화 인증하기](#)

02 아이핀 인증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i-PIN\(아이핀\)서비스 이용하기](#)



I

사이버성폭력이 무엇인가요?

II

사이버성폭력의 원인과 특징 살펴보기

III

사이버성폭력 사건해결안내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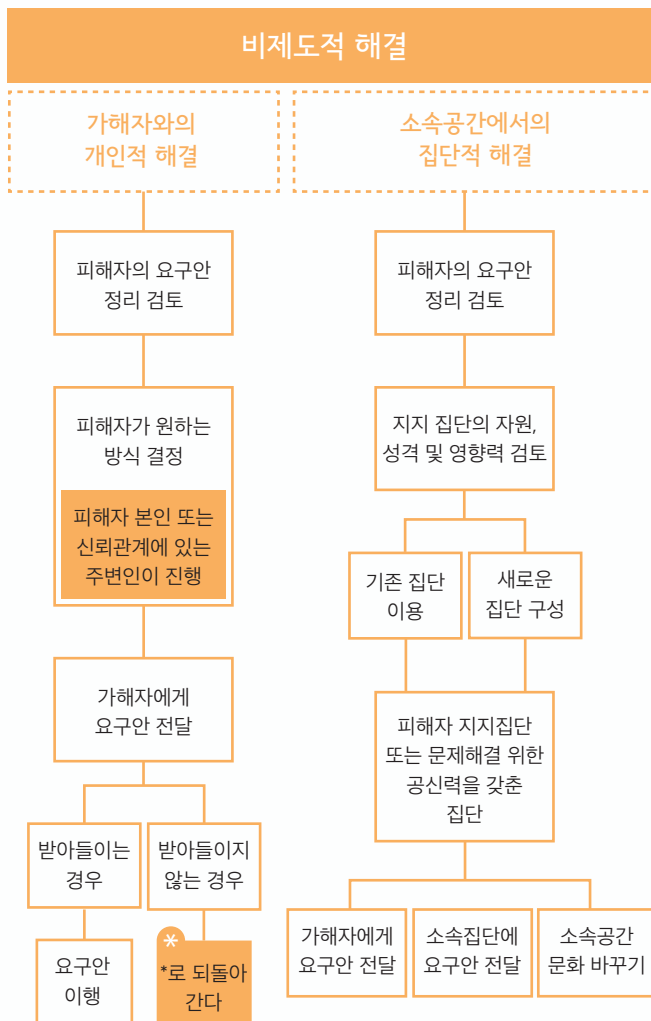
성폭력 사건지원자를 위한 안내

- | | |
|----------------------|----|
| 1. 지원과정과 소속공간별 해결 절차 | 62 |
| 2. 지원자로서 나 돌아보기 | 71 |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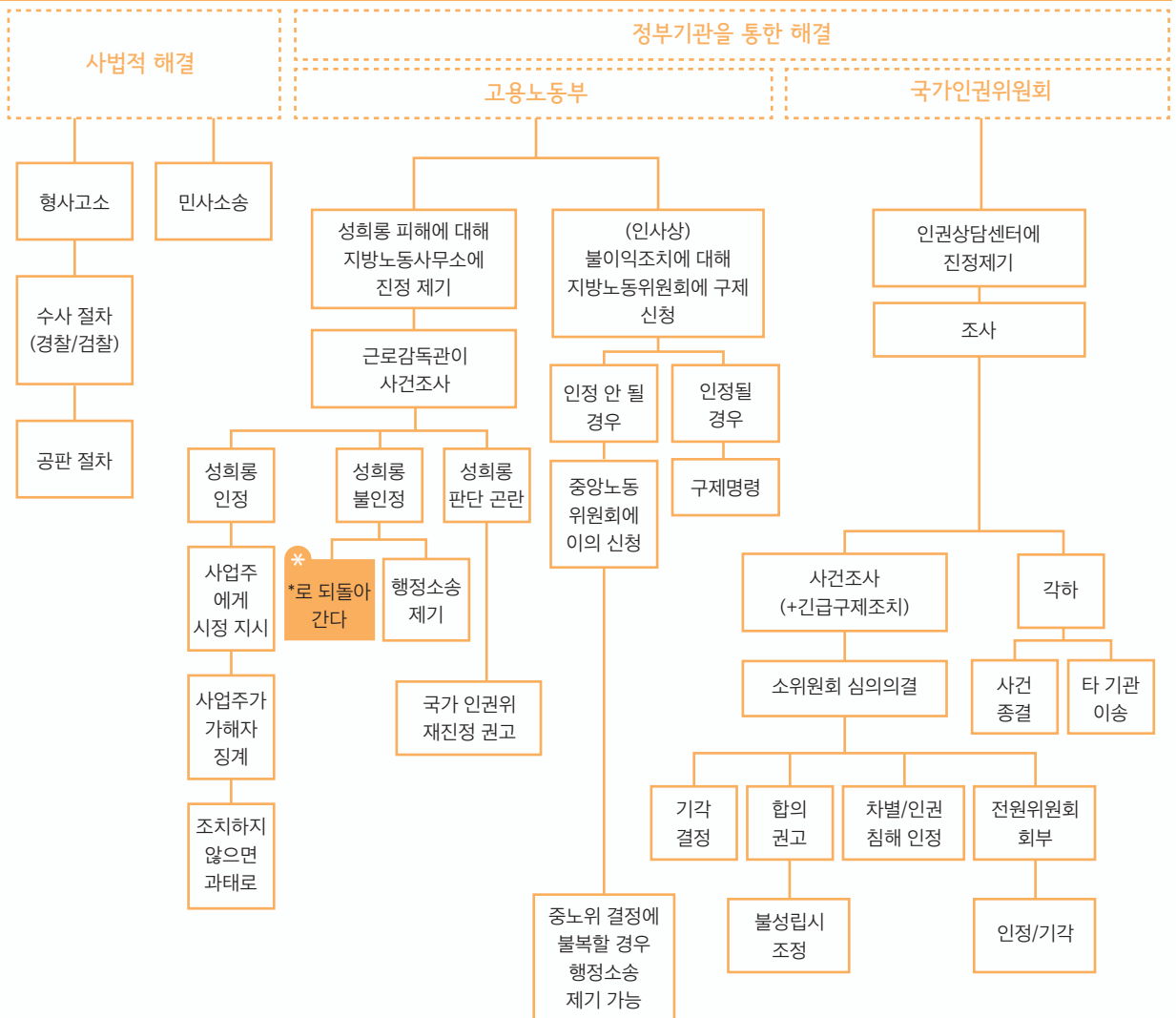
사이버성폭력에 맞서기

성폭력 사건 해결 지도²⁹



29 한국성폭력상담소(2008), 『성폭력 사건 지원 나침반을 찾아라! : 성폭력 사건지원자를 위한 가이드』 참고하여 일부 수정

제도적 해결



1. 지원과정과 소속공간별 해결 절차

사건 접수

- 이 부분은 사이버성폭력 뿐 아니라 모든 성폭력 사건 해결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사건 접수 단계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일정한 접수양식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 그렇지만 피해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공감과 지지를 표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가장 큰 지원은 피해자의 경험을 '잘 듣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살펴보기

- ◆ 피해상황
 - 피해 시기 (고소, 진정 등이 가능한 시점인지 체크)
 - 피해 장소
 - 사건 당시 상황
 -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
 - 가해자 (피해자와의 관계, 나이, 직업, 기타 특이사항)
 - 증인, 증거 유무와 내용 (현장 증거, 증인, 진단서, 사진, 사건일지, 진술서, 녹취록, 전화통화 내역, 내용증명, 공증 등)
 - 다른 피해자 존재 여부
- ◆ 현재 상황
 -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 상태는 어떤지
 - 가해자와 계속 대면해야 하는 상황인지
 - 의논 상대나 지지하고 지원해 줄 만한 사람이 있는지,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있는지
 - 피해자가 현재까지 취한 조치와 사건해결의 진행 상황

알려주기

- 제도화되어 있는 지원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무료법률지원, 변호사 조력 정보제공,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연계망 및 의료비 지원 정보제공, 심리상담, 타 기관 연계 등)
- 비제도적인 해결방안 등에 관해 포괄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지원하기

- 사건 정황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때 추측과 기억을 구분하여 적도록 하고, 감정도 함께 적도록 조언)
-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확보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도록 돕는다.
- 현 사건진행 단계 이후의 진행사항을 안내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한다.
-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법률기관, 심리상담소, 타기관 등으로 연계한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심리적 지지, 법적/의료적 지원, 피해구제 및 보상, 가해자 처벌, 심리상담, 공론화, 소속공간의 문화 바꾸기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지도는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지 못하며, 특히 제도적인 방법들은 기존 제도의 한계 안에서 서술되어 있기도 합니다.
-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피해자에게 지도 밖의 다양한 ‘원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듣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펴보기

- 피해자의 다양한 ‘원함’에 대해 듣고 확인한다.
-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르지 않은지 확인한다.
- 다양한 해결방식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지, 어느 한 가지 방법에 매여 있지는 않은지 확인한다.

알려주기

-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제도³⁰에 대해 알려준다
- 피해자의 요구안이나 원함 이외에 일반적인 경우 또는 다른 경우의 해결방안을 알려준다.

지원하기

- 피해자가 원하는 것과 현재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도록 돕는다.
- ‘원함’ 사이의 우선순위와 그 이유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30 이 안내서의 87쪽 참고.

다양한 사건해결 방법의 장·단점 검토하기

- 사건해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도 고민해 봅시다.
- 필요와 상황에 따라 다음 방법들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하거나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 ‘장점’과 ‘단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사회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지원의 지향과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장단점’을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 현실적인 한계는 인정해야 할 것이기보다는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 제도, 문화의 한계를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합시다. 우리의 목표는 법/제도의 유지가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니까요.

비제도적 해결

◆ 자조(집단) 활동³¹

장점

- 생존자 사이의 힘을 교환, 증폭시킬 수 있다.
- 상호 지지, 조언, 공감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만들어가게 된다.
-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스스로의 힘을 확인하고 강화해 간다.
- 피해자 개인의 내면 치유, 역량 강화에 집중할 수 있다.
- 성폭력피해의 맥락을 자신의 인생 전체에 걸쳐 되돌아보고,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재구성할 수 있다.

단점

-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지 않으면, 네트워크 결성 및 운영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 가해자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

31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피해생존자들의 자조모임인, ‘작은 말하기’를 개최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www.sisters.or.kr)

◆ 가해자와의 개인적 해결방법

장점

- 공론화가 가져올 수 있는 피해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 비교적 빨리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 요구안의 내용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단점

- 제3자(동료, 선배, 상사 등)가 피해자의 대리인 또는 중재 역할을 할 경우, 1:1로 요구할 때보다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 제3자의 의견이나 감정이 피해자보다 우선시되거나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가해자가 요구안을 받아들여 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제도적 해결을 시도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 있다.

◆ 소속공간 안에서의 집단적 해결방법

(예. 노동조합, 여직원회, 여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통한 해결)

장점

- 피해자가 소속공간 안에서 공식적이거나 공개적인 해결을 원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다.
- 가해자와의 개인적 해결에 비해, 가해자에 대한 압력을 좀 더 힘있게 행사할 수 있다.
- 소속공간(집단)의 문화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함께 할 수 있다.
- 성폭력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주변인들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할 수 있다.
- 요구안의 내용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단점

- ‘공신력’, ‘중립성’ 등에 대한 담론 싸움이 불거져 사건해결 과정이 지난해질 가능성이 있다.
- 소속집단 내의 다른 갈등이나 문제와 연루되어 성폭력사건의 본질이 호도될 수 있다.
- 가해자가 소속공간(집단)을 나가버릴 경우 다른 조치를 강구하기 어렵다.
- 가해자의 지위가 높은 경우 강력한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

제도적 해결

◆ 소속공간 안에서의 제도적 해결방법

(예. 학칙, 사규 등에 의한 해결)

장점

- 형사상 처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퇴사'나 '휴학 조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단점

- 가해자가 소속공간(집단)을 나가버릴 경우 다른 조치를 강구하기 어렵다.
- 가해자의 지위가 높을 때, 이러한 방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
- 가해자가 소송을 통해 소속공간의 징계 결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 (복직·복교)

◆ 사법적 해결방법

(예. 형법, 성폭력특별법, 민법 등에 의한 해결)

장점

- 법적인 강제력이 있으며, 가해자에게 강력한 위협이 될 수 있다.
- 성폭력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주는 안도감이 크고, 이후 소속공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성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인식시키고 상대적으로 가해자를 제재하는 효과가 있다.

단점

-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위가 제한적이다.
- 사건해결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 피해자의 의사 변화와 상관없이 사건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
- 소송에서 지거나 가해자의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을 때, 피해자의 좌절감과 위험부담 (예. 무고 피소)이 커질 수 있다.
- 법적으로 피해를 '입증'하는 데 부담과 어려움이 따른다.
- 민사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적게 책정되거나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 행정 부처를 통한 해결

(A) 고용노동부를 통한 해결방법

장점

- 성희롱 피해일 경우 권리구제 요청이 가능한 기간(3년 이내)이 길다.
- 다른 노동권 침해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예. 해고, 임금체불 등) 병합사건으로 다루기 용이하다.
- 성희롱 문제제기에 대한 불이익 금지조항과 이에 관한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단점

- 고용 형태가 특수한 경우, 먼저 노동자성을 증명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B)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해결방법

장점

- 국가권력에 의한 2차 피해가 있을 경우(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또는 군대나 구금시설에서 성폭력피해가 있을 경우 이를 진정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시정신청 없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다.
- 적용범위가 노동부에 비해 포괄적이다. (성희롱 행위주체자에 비상근임원 및 이사나 고문도 포함되며, 동성 간 성희롱 역시 조사범위에 포함됨.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직접적인 지시관계나 상하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업무에 대해서도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상황에 놓여 있으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함.)
- 기존 법체계에서 다루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성적 언동(퇴폐·음란 장소에서의 회식, 제3자를 통해 전해 들은 모욕적인 성적 언동, 노골적 성적 관계의 제안, 사이버성폭력 등)도 인권위의 권고 결정 대상이 된다.
- 일반적으로 권리침해 발생 이후 1년이 지난 진정은 각하되나 민사상 시효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 중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다루기도 한다.

단점

-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아예 사건을 다루지 않거나 진정이 각하된다. 진정 이후에 법적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면 사건은 해당 기구에 이송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종결 처리된다.
- 권고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없다.

(c) 교육부를 통한 해결방법

장점

- 국공립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의 교사 및 대학의 교수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사건에 대해 사법적 재판 결과 없이도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하다.

단점

- 가해자(교사, 교수)와 피해자(학생) 사이의 권력관계 때문에 피해를 문제제기했을 때 징계가 미약한 정도에 그치거나 징계 후 다시 복직할 경우 피해자가 겪을 위험부담이 클 수 있다.

사건해결 방법 결정하기

- 다양한 사건해결 방법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피해자 스스로 적절한 해결방법을 결정하도록 돕습니다. 자신의 결정이었는가에 따라 나중에 피해자가 힘을 되찾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자가 대신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합니다.
- 특히 '제도적 해결방법'은 현재 제도화되어 있는 처리 절차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의 장단점과 한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지원자의 목표이기도 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살펴보기

- 사건해결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이 피해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본다.
- 해결방법이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방법인지, 현재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인지 고민한다.
-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예측과 그 결과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살펴본다.
- 그 외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피해자의 준비 상황은 어떠한지 함께 돌아본다.

알려주기

- 제도적 해결의 경우 각 기관의 근거규정(법, 사규, 학칙 등)을 총체적으로 확인하고, 특히 적용범위와 신고기간 등을 파악한다. (세부규정이 바뀌었을 수 있으므로 최근 정보를 확인한다.)
- 특히 사법/행정기관을 통한 해결을 원할 경우,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사건을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제도를 어느 시점에 이용할 것인지를 신중히 고려하도록 조언한다.

지원하기

- 피해자의 결정에 대해 지원자로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2. 지원자로서 나 돌아보기

지원자로서 해야 할 일/하지 말아야 할 일³²

-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에 공감하고 필요시에는 위로 혹은 격려합니다.
- 피해자가 유포 등의 피해 후 고통, 공포를 느낄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감정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은 또한 현실에서 도피하고픈 욕망과도 맞닿게 됩니다.
- 후유증 안에서 너무 괴로워할 때, 피해자가 사건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며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 피해자가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알아보고 격려합니다. 피해자의 대응이 ‘내 입장에선’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나라면 ~ 했을 것이다” 라는 말은 비현실적이고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를 “이해해야 한다”, “용서해라”, “호기심이었다”라는 식의 말을 피해자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 보다는 우선 피해자의 마음을 살핍니다.
- 성폭력 피해가 스스로에게 인정되지 않거나 부끄럽게 여겨진다면, 내 안의 편견과 마주하고 성찰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피해를 입은 것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하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 성폭력 피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살면서 겪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후의 인생이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힘들어지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를 피해자로만 가두지 않고, 경험자, 생존자, 운동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32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상담 통계 : 개념과 대응』, 일부 수정

출처 : <http://www.sisters.or.kr/load.asp?subPage=224>

지원자로서 나의 인식 점검하기³³

‘변화하는 주체로서 피해자’를 바라본다.

→ 그렇지만 사이버성폭력 지원 과정에서의 나는

- 피해자의 여러 모습을 자꾸 성폭력피해와 관련된 것으로만 이해하려 한 적은 없는지
- ‘피해자가 피해자 같지 않네’라고 ‘불쌍한 피해자’를 상정하지는 않았는지
- 피해자가 성폭력이 아닌 다른 개인적 복수를 위해 성폭력을 고소·폭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 피해자의 금전적 합의 요구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지는 않았는지
- 피해자가 스스로 돌아봐야 할 지점을 ‘보호’라는 명목으로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피해자와 동등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한다.

→ 그렇지만 사이버성폭력 지원 과정에서의 나는

- 피해자의 치유 방향과 목표에 대해, 내가 먼저 답을 제시하고 이야기하지는 않는지
- 피해자의 학력·사회적 위치 등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대우하지는 않는지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을 하지는 않는지

33 한국성폭력상담소(2008), 『성폭력 사건 지원 나침반을 찾아라! : 성폭력 사건지원자를 위한 가이드』 참고하여 일부 수정

‘피해자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 그렇지만 사이버성폭력 지원 과정에서의 나는

- 피해자가 요청하면 무조건 대신 처리해 주려 하거나, 거절한 경우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지
- 가해자나 주변인, 관계자와 만나는 자리에서 피해자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독려하지 않고 내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얘기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남성사회의 기준에 맞춰 성폭력피해의 경중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그렇지만 사이버성폭력 지원 과정에서의 나는

- 피해자가 피해에 비해 과도하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감정을 외면한 적은 없는지
- 강간이나 추행에 비해 사이버성폭력은 심각한 피해가 아니라는 편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공감하지는 않는지

‘성폭력의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 그렇지만 사이버성폭력 지원 과정에서의 나는

- 반복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 사진이나 영상물 촬영에 동의했을 경우 피해자의 책임을 더 크게 생각한 적은 없는지
- 피해자의 성적 표현과 주체성이 사이버성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지

‘성폭력은 순결이나 정조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 그렇지만 사이버성폭력 지원 과정에서의 나는

- ‘이런 일을 겪고도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는지
- 나도 모르게 위험과 보호의 담론 속에서 ‘여성의 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 성경험이 많은 여성은 성경험이 없는 여성이나 어린이보다 덜 고통스러울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지

‘성폭력사건의 해결은 피해자의 치유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렇지만 사이버성폭력 지원 과정에서의 나는

- 법적·제도적 처벌 과정이 끝나자, 사건지원이 끝났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지
- 가해자 처벌에만 집중하면서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다른 지원을 놓치고 가지는 않았는지

‘제도적 틀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다.

→ 그렇지만 사이버성폭력 지원 과정에서의 나는

- 법적·제도적 해결방법만을 사건의 유일한 해결방법으로 생각하고 지나간 적은 없는지
- 제도적 방법으로 다루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 현재의 한계점과 어려움만을 이야기하고 사건해결의 다른 가능성을 찾지 않은 채 지원을 종료한 경우는 없는지

‘성폭력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 그렇지만 사이버성폭력 지원 과정에서의 나는

- 사이버성폭력을 조장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피해자가 호소할 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함께 움직이기보다 무력감 속에서 피해자의 호소와 감정을 회피한 적은 없는지

나의 사회적 위치와 조건 돌아보기

나의 사회적 위치와 조건에 대해 인식하기

- 우리는 성별, 나이, 국적, 교육 수준, 장애, 계급, 외모, 지역, 성정체성 등 복잡한 권력관계가 얽혀 있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특권’은 그것을 누리는 이에게는 ‘특권’으로 느껴지지 않으며, 바로 그것이야말로 ‘특권’이 비가시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주된 방식입니다.
- 다양한 사회적 위치와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 성폭력피해자들을 잘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원자인 나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사회적 조건을 살핌으로써 ‘나와 같지만,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나의 위치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나의 조건들을 적어보고, 아래 표에서 나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표시해 봅시다.

나의 성별 정체성은?

나의 교육 수준은?

나의 성적 지향은?

나의 출신 지역·거주 지역은?

나의 나이는?

나의 경제적 수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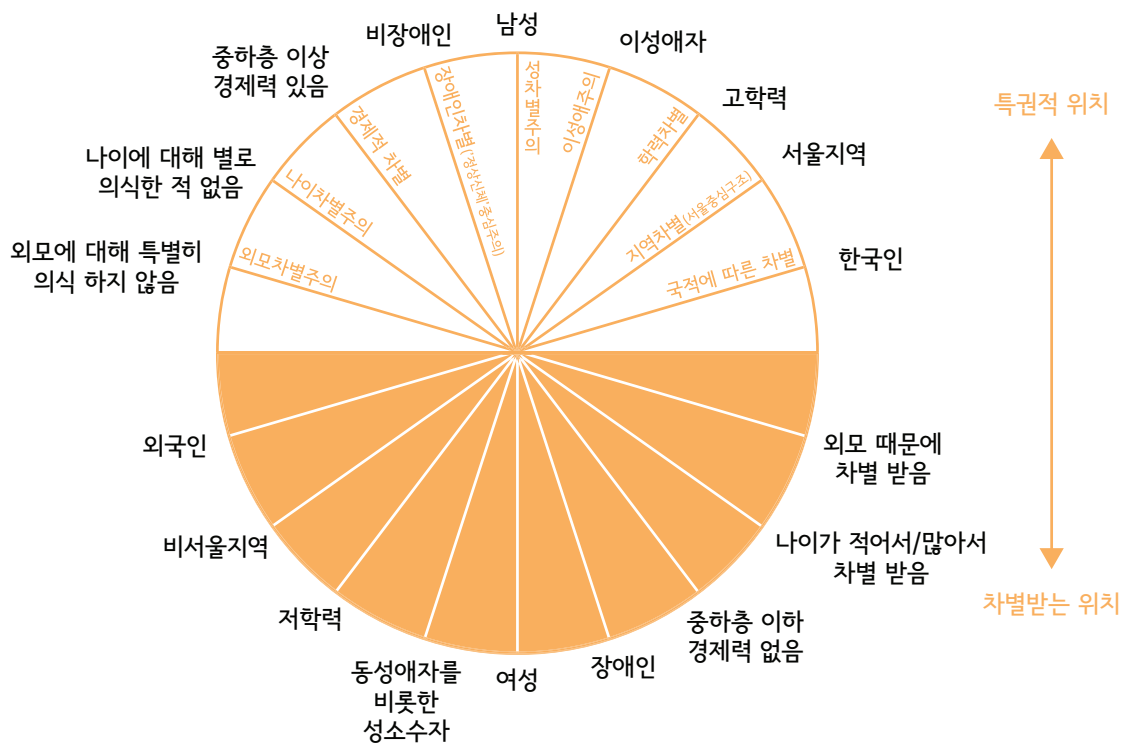
나의 국적은?

나의 외모는?

나의 장애 여부는?

나의 직업·고용 형태는?

나의 성폭력 피해 경험은?



각각의 항목에서, 피해자와 나 사이에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그 차이가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써봅시다.

피해자와 나 사이의		사건지원 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까?
공통점	차이점	
<input type="checkbox"/> 성별	<input type="checkbox"/> 성별	▶ -----
<input type="checkbox"/> 학력	<input type="checkbox"/> 학력	▶ -----
<input type="checkbox"/> 성정체성	<input type="checkbox"/> 성정체성	▶ -----
<input type="checkbox"/> 지역	<input type="checkbox"/> 지역	▶ -----
<input type="checkbox"/> 나이	<input type="checkbox"/> 나이	▶ -----
<input type="checkbox"/> 경제적 상황	<input type="checkbox"/> 경제적 상황	▶ -----
<input type="checkbox"/> 국적	<input type="checkbox"/> 국적	▶ -----
<input type="checkbox"/> 외모	<input type="checkbox"/> 외모	▶ -----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장애	▶ -----

그 밖에 내가 가진 특권과 내가 받는 차별을 적어보고, 이것이 사건지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가진 특권 _____

내가 받는 차별 _____

사건지원에 미칠 영향 _____

- I 사이버성폭력이 무엇인가요?
- II 사이버성폭력의 원인과 특징 살펴보기
- III 사이버성폭력 사건해결안내
- IV 성폭력 사건지원자를 위한 안내

V 사이버성폭력에 맞서기

- 1. 법과 제도의 변화가 필요해요 80
- 2. 인식 개선과 문화운동에 함께해요 82

1. 법과 제도의 변화가 필요해요

피해현실을 포괄하는 법해석과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 성적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신체부위, 음란성 등에 대한 피해자 입장에서의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수사과정에서의 추가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 수사기관의 낮은 젠더감수성으로 인해 증거물 영상의 재유포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거대웹하드 업체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필요합니다.

- 사건발생부터 해결과정과 그 이후까지 사이버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삭제업무와 유포플랫폼의 단속 강화가 필요합니다.
- 여성, 성소수자, 청소년,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자와 기업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규제를 가해야 합니다.

피해촬영물을 비밀로 하는 유포협박 피해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 피해촬영물이 유포되면 피해정도와 규모가 견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등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언제든지 쉽고 빠르게 유포할 수 있는 사이버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해 긴급한 제도장치가 필요합니다.

사이버성폭력의 특성상 근절을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필요합니다.

-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포르노사이트에 사이버성폭력 피해촬영물이 유통된 경우 추적과 삭제가 어려운 현실이며 가해자가 해외에 있을 때 수사자체가 어렵습니다.
- 따라서 국제공조를 통해 불법 포르노사이트 폐쇄 및 운영자 처벌, 그리고 해외에 있는 가해자 처벌을 위한 수사협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정부는 2017년 9월 26일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향후 법, 제도적 변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서울시에서도 2017년 디지털성범죄 방지방안 연구와, 사이버성폭력 피해물 삭제 지원 시범사업, 안심보안관 제도 등을 통해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 또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함께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발간하거나 사이버성폭력 인식개선을 위한 토크쇼를 진행하는 활동도 진행되었습니다.

2. 인식 개선과 문화운동에 함께해요

당신은 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 주변인이 메신저를 통해 피해 사진이나 영상 링크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링크를 누르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 사진 속, 영상 속 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한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은 자신의 성적 사진과 영상이 사람들의 기기를 통해 공유되는 것을 허락할까요?
- ‘이것 한번 봐봐’라는 말과 함께 피해촬영물을 타인에게 전송하고 공유하는 행위 역시 가해행위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 메신저창의 링크 클릭, 전송, 웹하드 업로드, 다운로드, 트위터의 공감, 리트윗, 페이스북의 좋아요, 게시물 공유 등, 성폭력 촬영물에 대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행위 모두 사이버성폭력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행위입니다.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 페이스북, 2017.11.11. 사이버성폭력 OFF 토크콘서트,

주최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주관 : 서울특별시, “난 너의 야동이 아니야”, 행사 사진

<https://www.facebook.com/ksvrc1991/photos/pcb.1485957111494033/1485956891494055/?type=3&theater>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과 모습으로 상호 교류할 권리가 있습니다.

- 사이버성폭력 피해자들은 원치 않는 방식과 모습으로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 길거리와 공공장소에서 동의없이 상대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촬영된 사진들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문란한' 여성으로 이름이 붙여져 올라가기도 합니다.
- 이러한 행위는 실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의 여성 및 소수자에 대한 편견/혐오/규범에 의거해 이루어지며 다시 그것들을 강화하고 당사자들의 몸과 행동을 위축시켜 자기검열하게 합니다.
- 우리는 자신이 정하는 모습으로 사이버 공간에 재현될 권리가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성평등의 가치를 지향해야 합니다.

- 온라인 공간에서 약자나 소수자로 여겨지면 공격, 모욕, 배제, 폭력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발화와 관계 맺는 방식도 현실이고, 현실을 만드는 힘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 법, 제도의 규제뿐 아니라 공동체의 한 시민으로서 성평등의 가치를 옹호하고 실현해야 합니다.
- 다양한 주체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교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부터, 사이버성폭력 반대운동에 함께 해요

- 사이버성폭력은 하나의 놀이문화로 굳어져왔기 때문에, 법과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나부터 사이버성폭력 반대를 위한 실천에 함께 해요!
- 피해촬영물을 소비하지 맙시다.
- 웹하드 등에서 피해촬영물을 발견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합시다.



출처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페이스북,
“빨간원 프로젝트 사이버 행동의 날” 홍보 이미지
<https://www.facebook.com/gyeonggipol/posts/1686279878070387>

부록

- | | |
|-----------------------|----|
| 1. 성폭력피해자 권리보장 제도 | 86 |
| 2.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89 |
| 3. 참고할만한 수사·재판 절차와 용어 | 90 |

1. 성폭력피해자 권리보장제도³⁴

성폭력피해자 지원제도

지원분류		운영주체	지원대상	지원근거
의료비 지원	의료비	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지방자치단체 등	성폭력피해자 및 그 가족	성폭력방지법 제28조
	돌봄비	해바라기센터, 지방자치단체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 및 성폭력피해를 입은자의 13세 미만 자녀(*만13세미만)	성폭력방지법 제3조
	간병비	성폭력상담소, 통합지원센터 등	성폭력피해자 (의료기관에 입원치료 중이며 가족으로부터 간병이 어려운 사람)	성폭력방지법 제28조
주거 지원	폭력피해여성주거 지원시설(그룹홈)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방자치단 등	성폭력피해자 및 그 가족	성폭력방지법 제3조
	국민임대주택			
긴급복지지원		보건복지부 (129 콜센터)	성폭력피해자 및 그 가족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
범죄피해구조금		피해자관할 주소지 지방 검찰청	성폭력피해자 및 그 가족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쉼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성폭력방지법 제12조

34 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2014),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안내서』, 한국성폭력상담소(2007),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위한 법률지침서』를 참고하여 일부 수정함

성폭력피해자의 권리 및 근거 법률

분류	성폭력피해자의 권리	근거 법률
수사재판 단계	성폭력전담수사관에게 조사받을 권리	성폭력처벌법 제26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법률조력을 받을 권리 ·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 무료법률구조	· 성폭력처벌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성폭력방지법 제3조 및 제7조2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의사소통 보조를 받을 권리	· 성폭력처벌법 제36조(진술조력인 수사과정 참여),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권리	· 성폭력처벌법 제34조 · 청소년성보호법 제28조
	비밀보장을 받을 권리	· 성폭력처벌법 제23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 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0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 성폭력처벌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권리 (범죄피해자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지원제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신변안전조치) ·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2조(신변안전조치)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2항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분류	성폭력피해자의 권리	근거 법률
	모욕적이거나 반복되는 조사를 받지 않으며 인권을 보호 받을 권리	· 성폭력처벌법 제2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38조(인권보호담당관 설치) · 인권보호수사준칙 제46조(2차 피해 방지) · 인권보호수사준칙 제68조~제71조
	진술 내용을 비디오 녹화촬영 등으로 보존할 권리	· 성폭력처벌법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공판기일 전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권리	· 성폭력처벌법 제41조(증거보전의 특례), · 성폭력처벌법 제31조(심리의 비공개), · 형사소송법 제184조
	의견을 제출하고 서류를 열람·등사할 권리	· 형사소송법 제 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처분 결과를 알 권리	· 형사소송법 제 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재판의 증인진술 단계	진술할 권리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피고인의 퇴정을 요구할 권리	· 형사소송법 제297조(피고인등의 퇴정)
	비공개 심리를 신청할 권리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피해자진술의 비공개), · 성폭력처벌법 제31조(심리의 비공개)
	법정 외에서 증인신문을 받을 권리	· 형사소송법 제165조(증인의 법정 외 신문)
	비디오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을 받을 권리	· 형사소송법 제 165조 2항, · 성폭력처벌법 제40조
	불필요한 반복증언을 요구받지 않을 권리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영상물 촬영)
	증인지원절차를 이용할 권리	· 성폭력처벌법 제32조(증인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재판 이후 단계	선고 결과를 알 권리	· 형사소송법 제45조(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 · 형사소송규칙 제26조(재판서의 등,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가해자에 대한 보석이나 집행정지의 취소를 요구할 권리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6조(보석 등의 취소)

2.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사이버성폭력 피해지원기관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02-817-7959, www.cyber-lion.com)
 - 서울특별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사업 관련 문의(02-2133-5035)
 -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5801, www.sisters.or.kr)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02-335-1858, www.womenlink.or.kr)
 -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02-2263-6465, www.hotline.or.kr)
 - 여성긴급전화 1366(전국 : 국번없이 1366, 서울: 02-1366, www.seoul1366.or.kr)
 - 전국해바라기 센터(서울 권역)
 - 연세의료원(02-3274-1375)
 - 경찰병원(02-3400-1700)
 - 보라매병원(02-870-1700)
 - 서울대학교 병원(02-3672-0365)
 - 삼육서울병원(02-3390-4145)
 - 국립중앙의료원(02-2266-8276)
- ➡ 이 외에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의 전국 180여개의 상담소에서, 의료, 법률,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 지원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www.klac.or.kr)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www.legalaid.or.kr)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4, www.rape119.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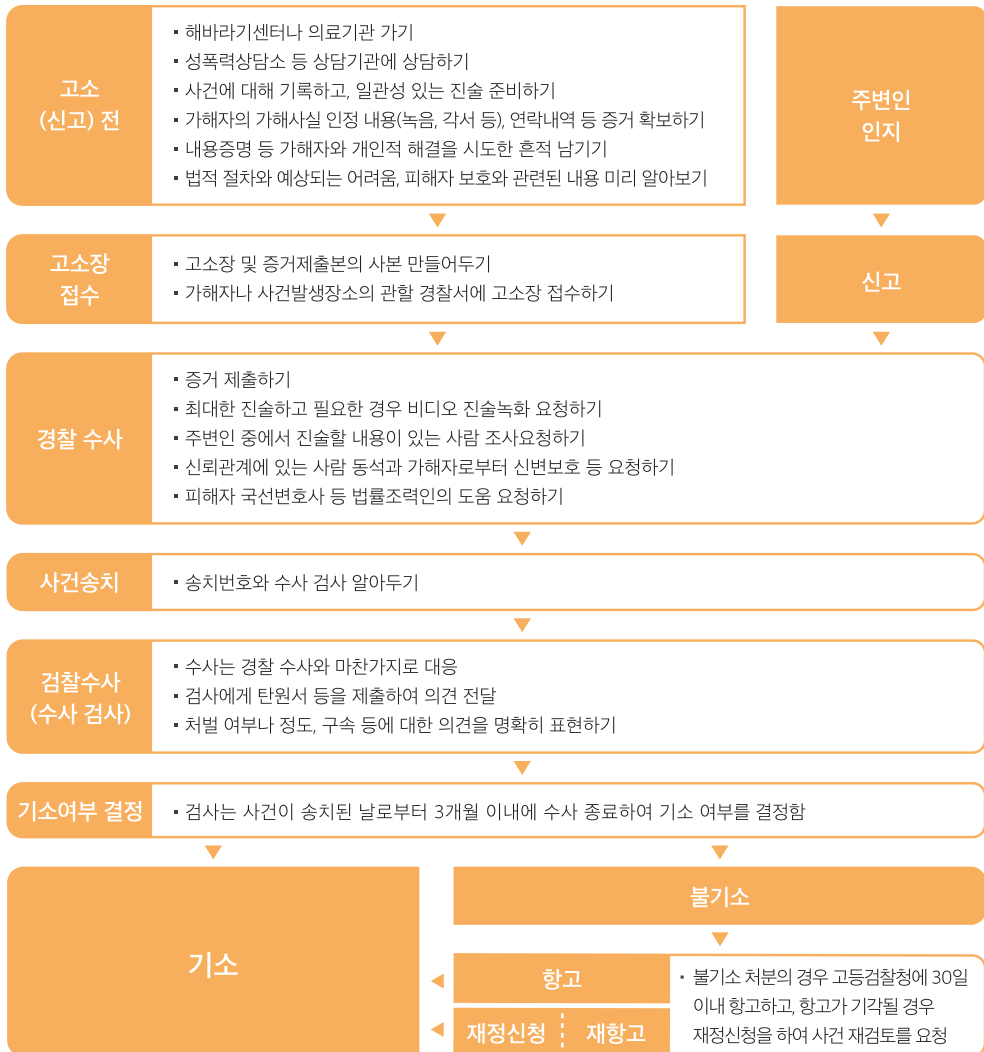
3. 참고할만한 수사·재판 절차와 용어³⁵

수사단계

이 부분은 수사·재판 절차와, 관련된 용어들을 수록하였습니다.

경찰고소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단계들을 거칠 수 있는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수사절차도



35 장애인여성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2014),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안내서』, 한국성폭력상담소(2007),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위한 법률지침서』를 참고하여 일부 수정함

수사개시단계

범죄의 고소, 고발, 자수, 신고, 인지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합니다.

고소, 고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인지

범죄의 고소, 고발, 신고 등이 없이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는 각각의 범죄마다 다르며 그 기산점은 범죄행위의 종료 시로 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고소하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검사가 이를 간과하고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내립니다.

내사

범죄의 혐의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건 전의 단계에서 수행하는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을 말합니다. 범죄에 관한 신문, 기타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에는 그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경찰조사단계

피해자조사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날부터 대략 1~2개월 내에 피해자를 소환하여 고소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조서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수사 내용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피의자를 조사한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인이나 참고인을 조사한 내용은 진술조서라고 합니다.

피고소인/피의자 조사

경찰은 피해자 조사 후 가해자로 지목된 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므로 고소를 한다고 해서 피의자가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하는 기준은 피의자의 도주 가능성, 증거 인멸 우려, 죄질 등이나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며, 특히 증거가 적은 경우는 더욱 확률이 낮습니다.

구속수사/재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체포에 비하여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강제수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와 제201조는 구속의 요건으로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1)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3)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구속이 되더라도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 등에 의하여 구속되었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피의자가 구속되기 위해서는 영장전담 판사가 사건을 검토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제도는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심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은 보통 피의자를 심문하는 것으로 그치며, 피해자나 제3자의 진술까지 듣는 경우는 적습니다.

구속적부심

이미 피의자가 구속이 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구속의 적법성을 검토하거나, 구속 이후 중대한 사정의 변화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없어졌는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면 법원은 청구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2항4)

경찰수사종결단계

송치

경찰에서 수사를 완료하고 수사 의견을 첨부하여 검찰로 사건 기록을 넘기는 것을 송치라고 합니다. 고소, 고발 사건의 경우 경찰은 고소, 고발장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할 때에는 사건에 대한 의견을 함께 알리는데,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는 것은 수사결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뜻이고,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혐의가 없는 등의 이유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는 경찰의 의견으로 검찰은 독자적인 수사결과에 의해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경찰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는 고소, 고발자의 권리입니다.

검찰수사단계

공소제기(기소)

공소제기 또는 기소는 피의자에게 유죄 혐의가 인정되는 범죄사건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그 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소 또는 고발에 따른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불기소

① 혐의 없음(무혐의, 범죄 인정 안 됨)

수사 결과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2호가목)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대해 판단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

②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2호나목)

③ 기소유예

검사가 수사한 결과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기소를 미루는 결정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1호)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며, 개과천선(改過遷善)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제1항) 또 소년인 피의자에 대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제3항)

④ 죄가 안 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3호)

⑤ 공소권 없음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법령의 개폐(改廢)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면(赦免)이 되거나 형이 면제가 된 경우 등에 내리는 처분입니다. 또한 동일사건에 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나 그 공소를 취소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닌 이상 다시 기소할 수 없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9조제3항제4호)

⑥ 각하

검사는 사건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 처분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5호)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혐의없음이나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 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롭게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각하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등입니다.

기소중지

피의자나 목격자 등이 출석하지 않아 수사를 계속할 수 없어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밝힐 수 없을 때 내려지는 조치로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잠정적으로 기소를 중지하는 것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이때 피의자가 도주를 한 경우에는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명수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피의자를 다시 발견하게 되면 다시 수사를 계속하게 됩니다.

항고/재정신청/재항고

① 항고

검사의 처분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통하여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이유를 포함한 항고장을 제출하여 사건재수사신청(항고)을 할 수 있습니다. 항고장은 사건번호와 사건명, 피의자 성명, 항고이유, 날짜, 작성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정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제2항)

② 재정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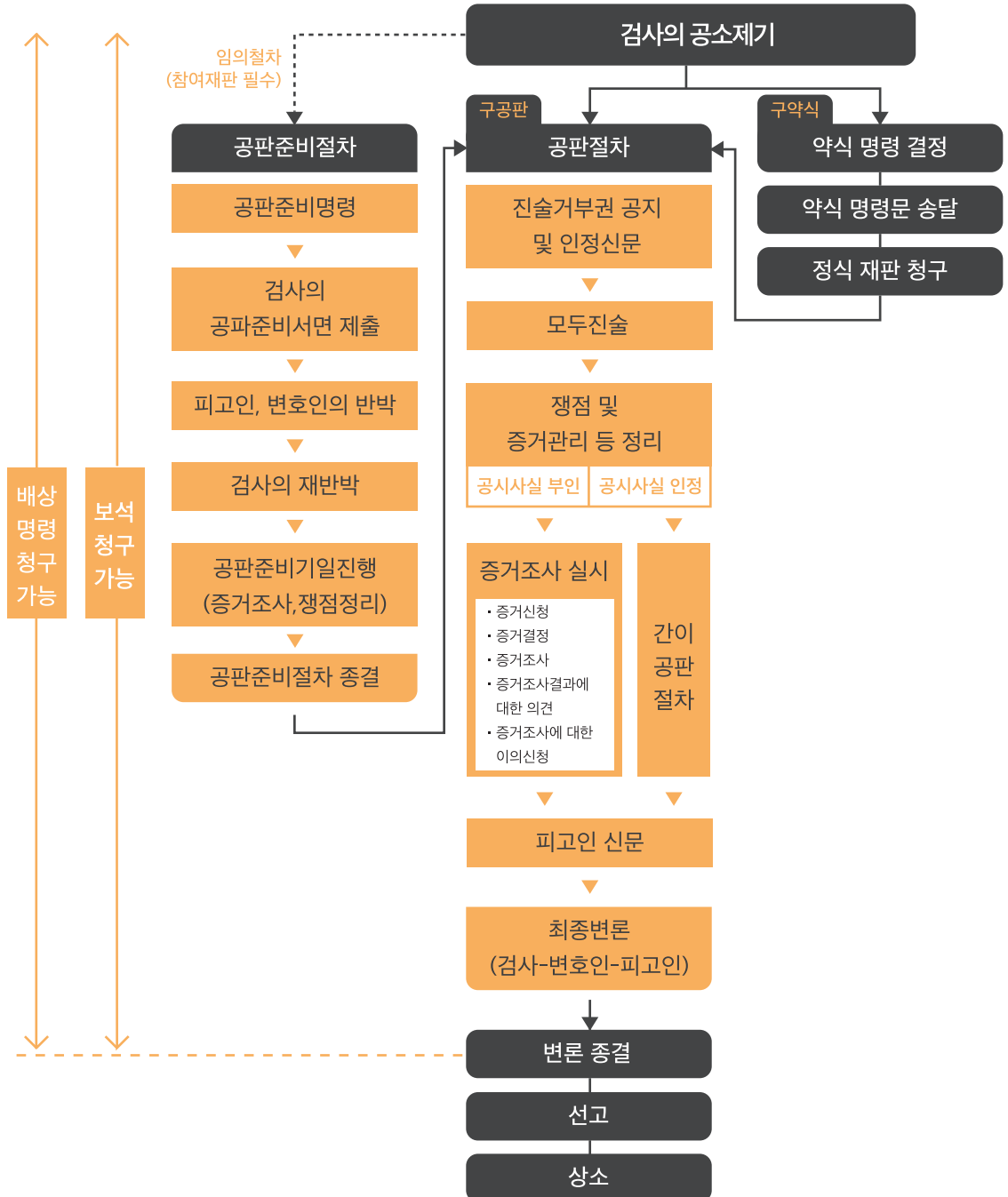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관할고등법원에 그 결정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항고의 기각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항고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해지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 2항, 제3항, 제4항)

③ 재항고

재정신청권자(피고인 또는 고소인, 고발인, 대리인)가 아닌 사람은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3일 이내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항) 공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합니다.

재판단계

재판절차도



피의자/피고인

가해자로 지목된 자는 수사 절차에서는 피의자로, 재판절차에서는 피고인으로 불립니다.

약식 명령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즉, 죄질이 비교적 가볍고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는 등 피의자에 대한 벌금의 부과만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을 간이하게 기소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간이한 형태이기 때문에, 법원 역시 공판을 열어 피고인을 신문할 필요 없이 서면심리(피고인에 대한 수사기록만을 보고 판단)를 통해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 등의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를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판사는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할 수도 있으며,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상고

재판 판결 선고 후 검사와 피고인 및 피고인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7조)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71조)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

유죄판결과 무죄판결

① 유죄판결

심리 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유죄인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형은 교도소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복역하게 되는 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곧바로 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뤄 그 기간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집행유예이고,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기간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선고유예입니다.

② 무죄판결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공소사실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때 법원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 밖의 용어들

책임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만한 능력이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가 강간을 한 경우 그 행위는 강간죄에 해당하고(구성요건), 법적으로 처벌해야 할 나쁜 행위로 인정되지만(위법성), 가해자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만한 정신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책임조각)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게 됩니다.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전환과 위법성 조각사유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성요건-위법성-책임의 3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보통 구성요건이 인정되면 위법성과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며 위법성이 없다는 사유(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어떤 행위가 외형적으로는 범죄에 해당하지만 그런 행위를 정당화시켜 주는 요소가 있는 경우 범죄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법성 조각사유 중 대표적인 것이 정당방위인데, 강간을 하려는 가해자에 대항하다가 가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상처를 입힌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하지만(구성요건) 그것이 강간을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 것입니다.

민사소송

소장 접수

- 원고 주소지, 피고 주소지, 불법행위지 관할법원에 제기
 - 피해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하고, 그로 인해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밝힘
 - 증거(치료비 영수증, 성폭력사건에 대한 판결문 등) 제출하기
- 제출된 소장을 법원이 심사하여 원·피고를 표시하고, 인지, 송달료, 관할 등 형식적 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내리고 부족한 부분이 없으면 가해자(피고)에게 소장 부분을 보내 1개월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변론 준비 절차

- 가해자(피고)의 답변서와 준비서면 반박, 가능한 모든 주장에 증거/증인 언급
 - 소장에 첨부하지 못한 증거 추가제출, 수사·재판기록은 인증등본송부촉탁 신청하여 증거로 제출
- 서면을 통해 피해자(원고)와 가해자(피고)는 서로의 주장과 증거를 보충하는데, 쟁점이 복잡한 경우는 준비기일(정식재판은 아니지만 판사, 원고, 피고가 대면하여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을 통해 쟁점을 정리한다.

변론기일

- 목격자, 전후상황을 아는 사람, 의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
- 변론준비절차의 주장을 정리하여 제출하며, 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다.

판결선고

- 판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

범죄로 인한 재산상 피해(치료비 등)와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은 민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민법 제750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승소하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동시 내지 확정된 후에 진행할 수 있으며, 수사 결과 불기소처분이 되거나, 형사소송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경우, 가해자의 행위가 형사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형사소송에서 가해자의 유죄가 인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피해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배상 액수에 관하러만 다툼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비교했을 때 가해자의 불법행위 입증이 덜 엄격하므로 형사소송에서 가해자의 무죄가 인정된 경우에도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은 크게 정신적 손해(위자료), 재산적 손해로 나눌 수 있는데, 재산적 손해는 소극적 손해(피해자가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수입), 치료비 등 피해자가 지급한 비용인 적극적 손해로 나누어집니다. 세 가지의 손해는 별도로 계산되므로 소장에 기재할 때 각 손해에 해당하는 액수를 밝혀야 하며, 각각 손해의 액수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정신적 손해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보전조치

재산보전조치란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이 있기 전까지 가해자가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숨기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이러한 재산보전조치의 일종인데, 특히 금전과 관련된 채권(예.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가해자인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서 그 처분 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